

2018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청년노동실태조사종합보고서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8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청년노동실태조사종합보고서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글 싣는 순서

1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표 인사말	2
2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4
3	그림 차례	6
4	표 차례	8

2018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배경 및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11
2	사업개요	12
3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13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보고서

1	실태조사 진행경과 및 개요	19
2	실태조사 설문지 분석 차트	20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대안

1	청년들의 노동실태 현황	51
2	실태조사 연구요약	55
3	청년노동 정책대안	57

붙임 자료

1	웹진 모음	1
2	활동사진 모음	
2-1	노동인권강좌	9
2-2	노동인권학교	13
2-3	노동실태조사	16
2-4	노동정책토론회	19
3	청년노동실태조사 조사원 활동소감문	20
4	청년노동실태조사 홍보물품	22
5	청년노동정책토론회 언론기사모음	23
6	청년안심사업장 현판	26
7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지	27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35

청년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인권이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한 노동인식이 사회정치적으로 미비하다보니 사업주나 노동자의 관계에는 전근대성이 남아있었고, 사회적 경향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에 더 쉽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학업 중에 불가피한 노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많고 졸업 후에도 실업상태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은 청년문제에서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뿐만 아니라 개인신용, 건강권, 상실감 등으로 복합적인 고통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청년문제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현대판 신분제처럼 차별이 굳혀진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둘째 치고 현재의 생존, 그 자체가 더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문화 등 총체적인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출발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이 해소되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의 행복으로 표현되어야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행하고, 누군가가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노예적 차별을 목인하는 사회, 재벌중심, 부자중심, 1%중심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원시적 노동현실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사회민주화도 실현될 수 없고 청년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청년들을 정책과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계층이며 사회의 무한한 잠재력이자 미래의 원동력입니다. 청년문제는 청년들을 주체로 세우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실태조사에는 작지만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지역과 사회전반을 온전하게 반영하기엔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진단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전된 노력을 하려는 것은 긍정적인 일

입니다.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전 세대들이 살아온 결과이고 미래는 오늘 세대들이 살아간 결과입니다. 현재를 바꾸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문제를 개혁해야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가 그러한 진심어린 울림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대전시와 관계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비정규센터는 노동인권을 위해 지역과 함께 공감하고 사회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이대식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며

2018년 지역노사민정협력지원사업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청년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세대인 청년들이 우리시대에 장기간 실업과 저임금 노동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사회양극화, 금수저 논란,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중첩되며,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들을 쏟아 냅니다. 중앙정부도 많은 정책들을 쏟아 냅니다. 하지만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청년들의 체감은 얼마나 될지 아직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일자리로 집중된 청년정책들을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관점입니다. 수많은 취, 창업 일자리 정책들이 있지만,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실의 ‘청년노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살펴보고, 청년노동의 극복과제를 찾아내어,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을 진단해 보고,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세대들을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하고, ‘노동인권학교’를 통해 청년노동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노동의 현 주소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청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욕구도 확인되었습니다. 6차례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자리를 쏟아내는 정책보다는 현재의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을 정책과정의 주체로 세워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등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펼쳐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다양한 복지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센터는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많은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노동’이라는 청년노동자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또 실태조사와 토론회 이후, 청년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원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조사사업이 대전지역 청년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정책생산과 추진되는 사업들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8년 12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홍춘기

<그림 차례>

그림 1	연령대	21
그림 2	성별	22
그림 3	주생계부양자	23
그림 4	거주형태	24
그림 5	출생지	25
그림 6	현 거주지	26
그림 7	고용형태	27
그림 8	정규직 임금현황	28
그림 9	무기계약직 임금현황	28
그림 10	비정규직 임금현황	29
그림 11	직업별 분류	30
그림 12	1일 평균노동시간	31
그림 13	주당 근무일수	31
그림 14	생활비 지출항목	32
그림 15	취업정보습득	33
그림 16	취업정보 도움	34
그림 17	취업장애요인	34
그림 18	부당행위 경험	35
그림 19	이직경험	36
그림 20	이직사유	37
그림 21	이직이후 급여의 수준	37
그림 22	이직이후 고용안정성	38
그림 23	일자리 선택 시 중요요인	39
그림 24	임금/급여수준	40
그림 25	고용안정성	40
그림 26	근로시간	40
그림 27	근로환경/복리후생	41

그림 28	회사규모	41
그림 29	전공분야와 관련성	41
그림 30	회사와 개인의 발전가능성	42
그림 31	직업의 미래 전망	42
그림 32	출/퇴근 거리	42
그림 33	현 직장 근로여건 만족도	43
그림 34	임금/급여	43
그림 35	고용안정성	44
그림 36	근로시간	44
그림 37	근로환경	44
그림 38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성취감 등	45
그림 39	회사의 성장가능성	45
그림 40	개인의 발전가능성	45
그림 41	직장 내 인간관계	46
그림 42	직장문화	46
그림 43	청년취업희망카드인지도	47
그림 44	청년희망통장 인지도	48
그림 45	청년정책만족도	48
그림 46	필요한 청년정책선호도	49
그림 47	신보라의원 2017년 국정감사자료	59

<표 차례>

표 1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2018년 11월 52

표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4/4분기 행정구역(시/도) 연령별경제활동인구 ... 53

표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 실업자수 (단위천명) 2018년 1/4분기 53

표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54

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55

표 6 고용형태별 급여수준 (단위 명) 56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민·정 토론회

배경 및 개요, 추진내용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배경

- 수도권 중심의 집중이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지역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등 이는 곧 대전지역 내 좋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전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고용불안정의 요소들이 여전함.
-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고 청년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부족한 지점이 존재함. 특히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인터뷰, 토론회 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적 대안과 지원 미흡으로 인해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시도들과 지역 차원의 대안을 위한 대응방안들이 부족한 편임. 따라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일 자리를 만들어나갈 대안과 노동존중사회의 가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대안 모색
 - 대전지역 청년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환경 등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처한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노동환경의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대전광역시를 노동 존중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의 모색
- 청년노동자(예비청년노동자 및 대학생) 노동인권 증진
 -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등에 대한 공개강좌 및 노동인권학교를 통해 노동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감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과 협력방안 마련
 - 청년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노동존중사회로의 완성과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마련
- 대전지역 관내 우수사업장 선정을 통한 노동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청년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의 제공과 노동권익을 실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언론 공개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고 여론을 환기시킴

2. 사업 개요

□ 사업 명 :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민·정 토론회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10개월간)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대전지역 청년 노동자 및 예비 노동자

○ 사업내용

-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공개강좌
-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학교
- 청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청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 안심사업장 협약 및 우수 사업장 선정

□ 기대효과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

- 청년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청년노동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파악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 발굴

- 청년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적 대안의 발굴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을 찾고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증진

- 청년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화, 노동존중사회로 진입 및 노·사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3.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1.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공개강좌

○ 대전소재 대학 및 청년단체 대중강연회

▪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각 대학별 대학구성원, 예비노동자 등 총 500여명

1차	일 시	2018년 05월 22일(화) 13시
	장 소	카이스트 장연신 학생회관
	주 제	“일한만큼 돈, 권리 존중받는 법”
	강 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2차	일 시	2018년 05월 25일(금) 19시
	장 소	자연드림 송촌점
	주 제	“당신이 알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되는 노동이야기”
	강 사	양보규 (대전지역희망노동조합위원장)
3차	일 시	2018년 05월 29일(화) 19시
	장 소	충남대학교 사회대학 시청각실
	주 제	“당신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 하지마”
	강 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4차	일 시	2018년 06월 16일(토) 13시
	장 소	대흥동 청춘학교
	주 제	“꼭 알아야할 노동인권 & 알바상식 이야기”
	강 사	이진아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5차	일 시	2018년 07월 20일(금) 19시
	장 소	대흥 노마드
	주 제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이야기”
	강 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6차	일 시	2018년 11월 15일(목) 19시
	장 소	한남대학교 cafe 꿈 ASia
	주 제	“나쁜 사장과 싸워서 이기는 법”
	강 사	최영연 (법무법인 여는 공인노무사)

2.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학교

○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학교

-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청년노동자 및 예비노동자 등 100여명

1차	일 시	2018년 07월 10일(화) 17시
	장 소	청춘 너나들이
	주 제	한국비정규노동과 청년 - “비정규직은 청년의 문제입니다.”
	강 사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차	일 시	2018년 07월 17일(화) 17시
	장 소	청춘 너나들이
	주 제	청년노동인권이야기 - “우리의 노동인권, 스스로 지킵시다.”
	강 사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3차	일 시	2018년 07월 24일(화) 17시
	장 소	청춘 너나들이
	주 제	역사 속 노동자의 삶 -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강 사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4차	일 시	2018년 07월 31일(화) 17시
	장 소	청춘 너나들이
	주 제	청년노동정책과 방향 -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강 사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3.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세부사업 명 :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주요내용

- 사업시기: 2018년 8월 ~ 11월
- 사업주체: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사업내용

□ 실태조사 진행경과 및 개요

○ 실태조사 진행시기 : 2018년 8월 ~ 11월

○ 조사대상

- 대상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 400여명
- 연령대 : 만 19세 ~ 만 35세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 최종 설문응답 수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 402명

4.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 세부사업 명 : 종합보고서 발간

5. 청년노동 정책토론회

□ 세부사업 명 : 청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 일시 : 2018. 12. 04(화), 15:00~17:00

□ 장소 : 대전시의회 대회의실(4층)

□ 참석 대상 : 30명 내외

○ (토론자)

- 주제 발표자 1 정현우 (노동인권강사)
- 주제 발표자 2 홍춘기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 토론자 1 우승호 (대전시의회의원)

- 토론자 2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3 최영연 (법무법인 여는 공인노무사)
- 토론자 4 김영진 (대전혁신청 사무국장)
- 토론자 5 김채란 (대학생)

o (참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청년기업, 청년노동 종사자, 청년단체, 대전광역시, 대전지역 언론사 등

6. 안심사업장 선정

□ 세부사업 명 : 안심사업장 선정

o 주요내용

- 사업시기: 2018년 11월
- 사업주체: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사업내용
 - 청년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안심사업장 선정
 - 노동존중, 노동인권실현 안심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사업장 현판기증
 - 언론홍보를 통한 사업장 홍보 및 노동인권존중 사회실현

o 선정기준

-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행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 등 지급
-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및 존중

o 선정 사업장

	업소 명	소재지
1	맘스터치 태평점	중구 태평로 71 1층(태평동)
2	푸른잎 유흥족보쌈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5(가양동)
3	대덕품앗이협동조합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법동)
4	라오왕	서구 둔산로 72(둔산동)
5	낭만술집	유성구 온천로 45(봉명동) 1층

2018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보고서

□ 실태조사 진행경과 및 개요

- 실태조사 진행시기 : 2018년 8월 ~ 11월
- 조사대상 :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 400여명
 - 연령대 : 만 19세 ~ 만 35세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 최종 설문응답 수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 402명
- 조사방법
 - 조사원 모집을 통한 직접 대면방식 설문조사 진행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직장인 : 아르바이트(60 : 40) 비율로 설문조사 진행

□ 기대효과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
 - 청년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청년노동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파악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 발굴
 - 청년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적 대안 발굴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을 찾고,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 사업 계획수립
-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증진
 - 청년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화, 노동존중사회로 진입 및 노·사·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2

실태조사 설문지 분석 차트

1) 연령대

- 대전시 청년 400여명을 대상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20대 청년노동자가 실태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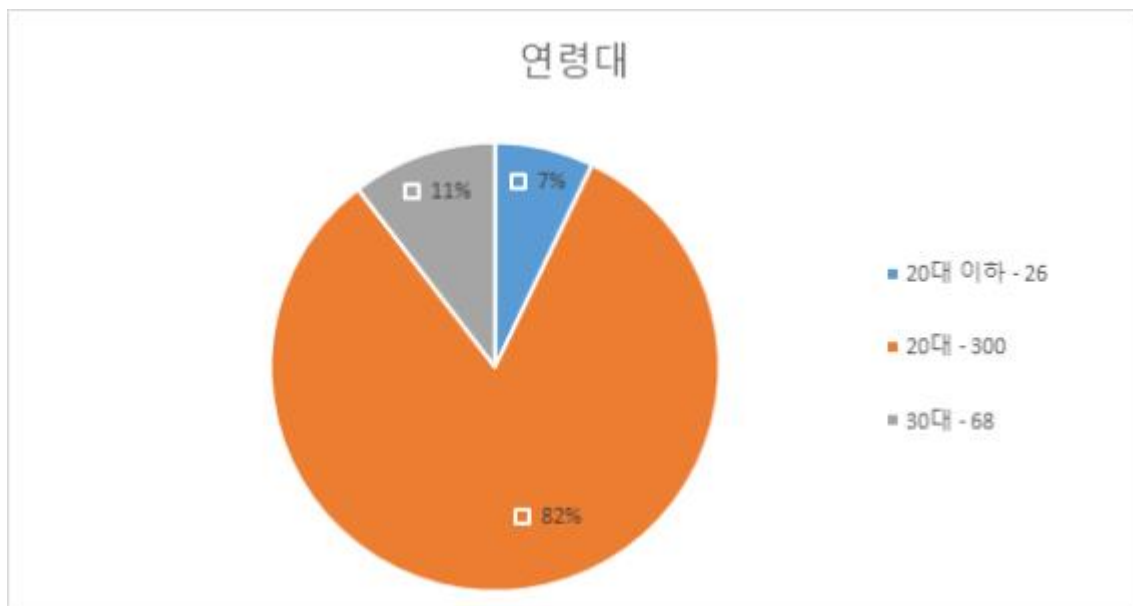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 (응답 394명. 단위 : 명)

2) 성별

-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년 노동자 중 여성(51%)과 남성(49%)의 비율은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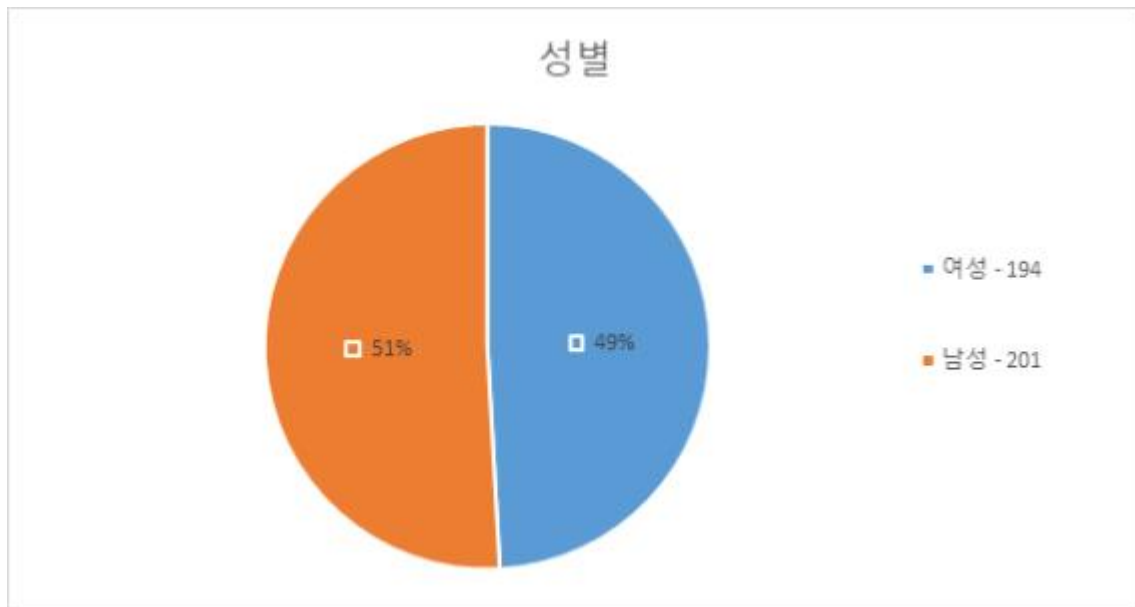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응답 395명, 단위 : 명)

3) 주 생계부양자

- 주 생계부양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비율(58%)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대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 비율이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은 본인(36%)으로 독립세대 또는 기혼세대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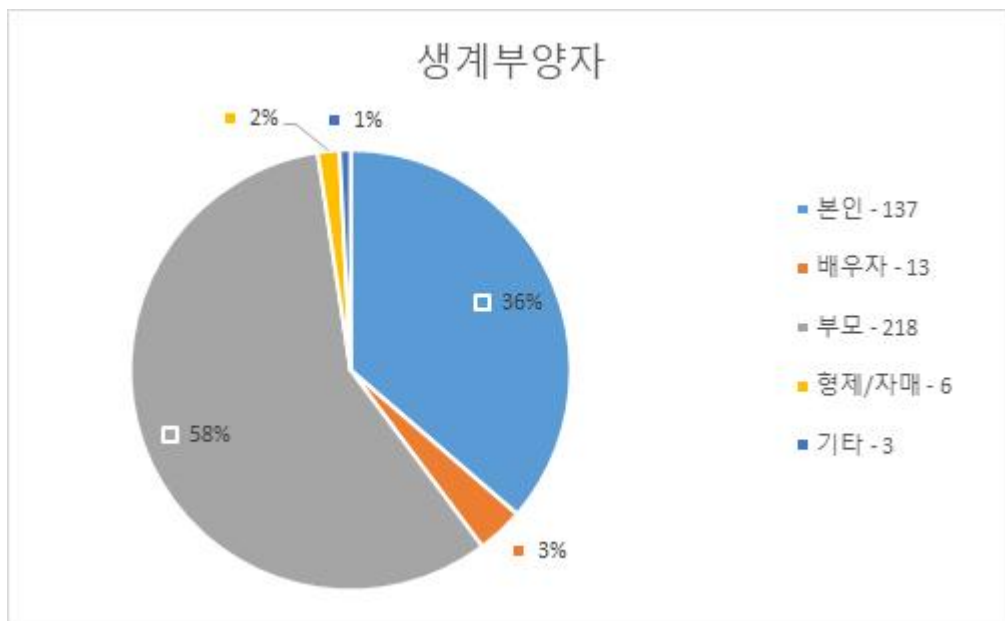


그림 3 주생계부양자 (응답 377명, 단위 : 명)

4) 거주형태

-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51%)과 따로 거주하는 비율(49%)이 반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계부양자 비율에서 나타난 독립세대, 또는 기혼세대 비율과 크게 벗어나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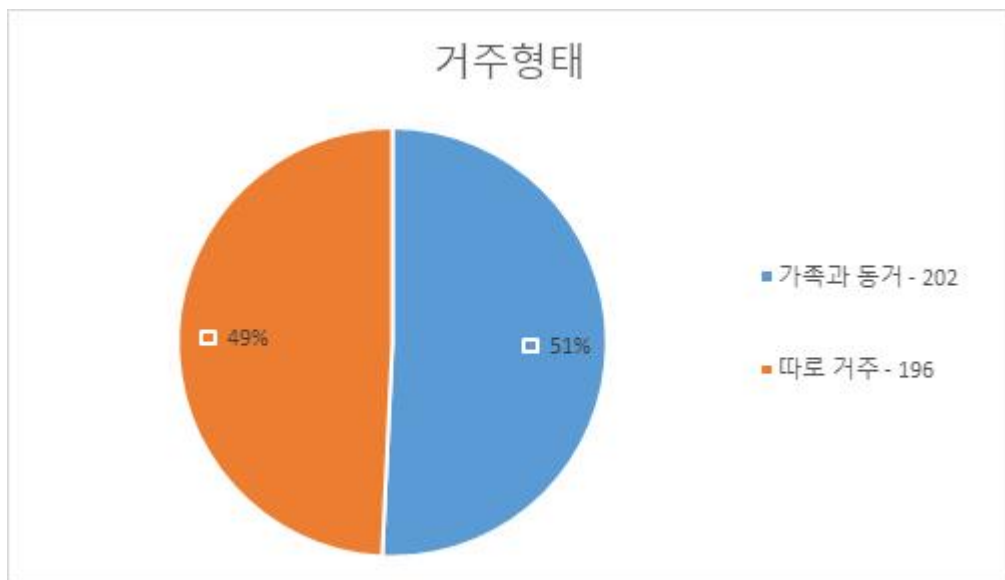


그림 4 거주형태 (응답 398명, 단위 : 명)

5) 출생지

- 출생지는 대전(46%)이고, 충청지역(20%)이, 충청권 이외의 지역(34%)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청권 출신이 많기도 하지만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수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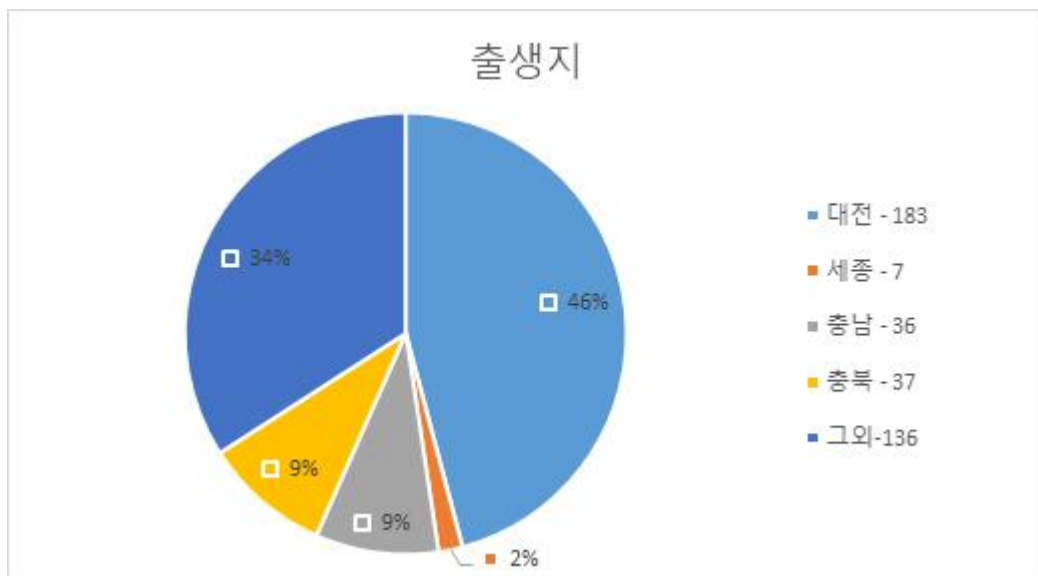


그림 5 출생지 (응답 399명, 단위 : 명)

6) 현 거주지

- 현거주지는 서구(25%)와 유성구(34%)의 신도심 지역의 비율(59%)이 높았고, 구도심지역(35%), 대전 이외지역(6%)로 서, 유성구 이외 거주비율(41%)은 낮게 타나났다. 이는 대전지역 인구이동 형태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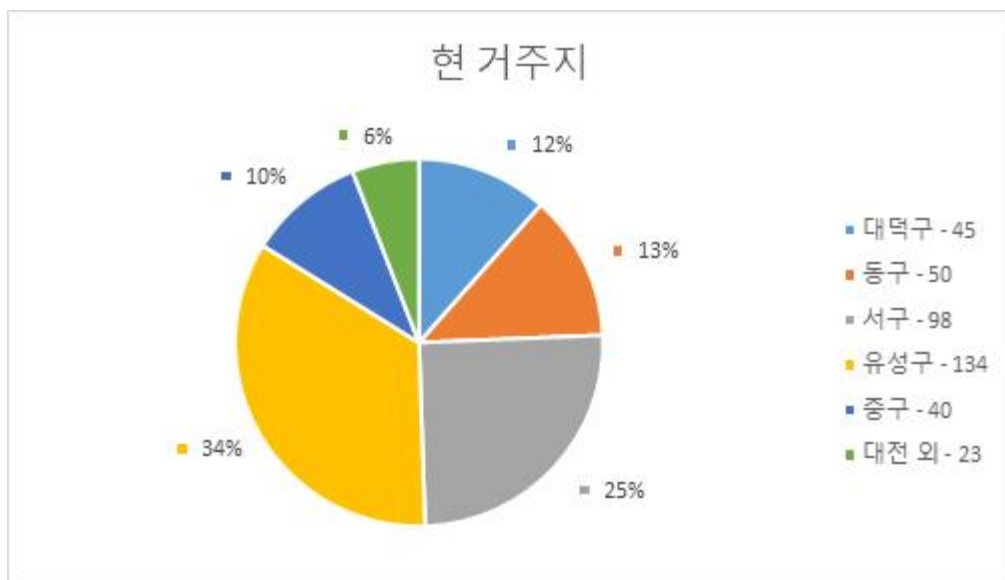


그림 6 현 거주지 (응답 390명, 단위 : 명)

7) 고용형태 및 임금현황

-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정규직이 97명, 무기계약직 39명,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250명으로 대전지역 내 청년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규직 임금이 2,000만원에서 3,500만원 미만이 50%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2,000만원 미만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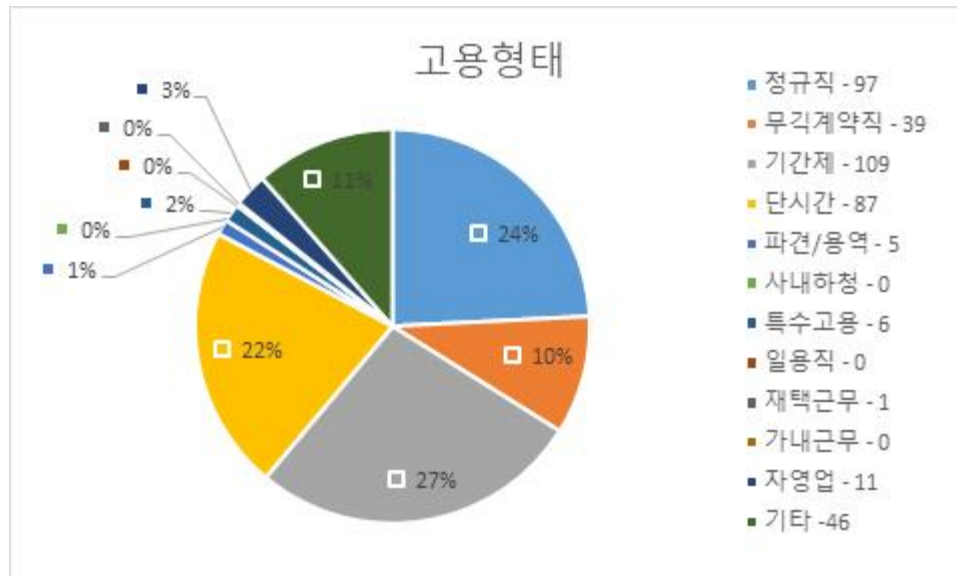


그림 7 고용형태 (응답 401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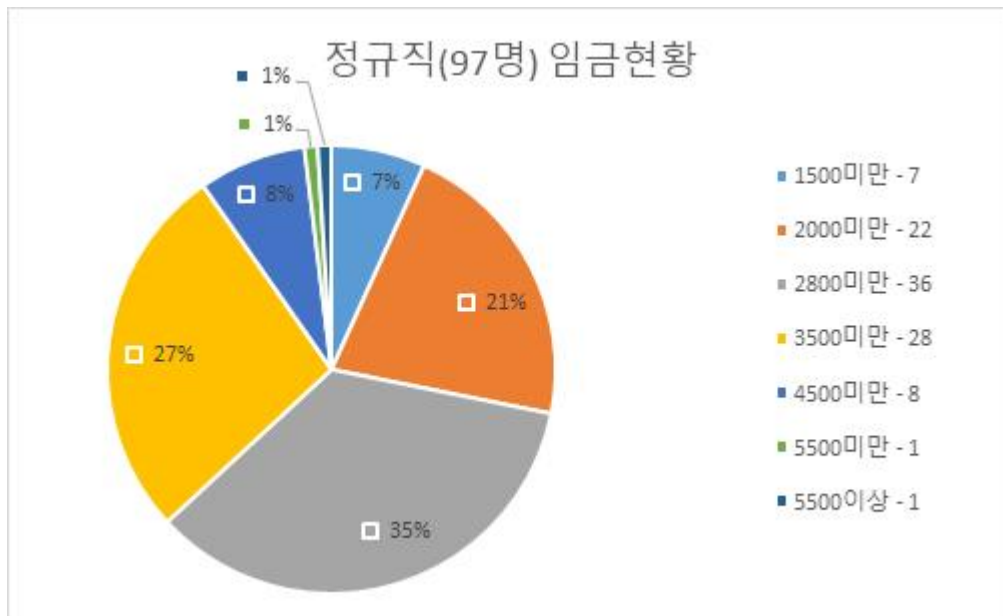


그림 8 정규직 임금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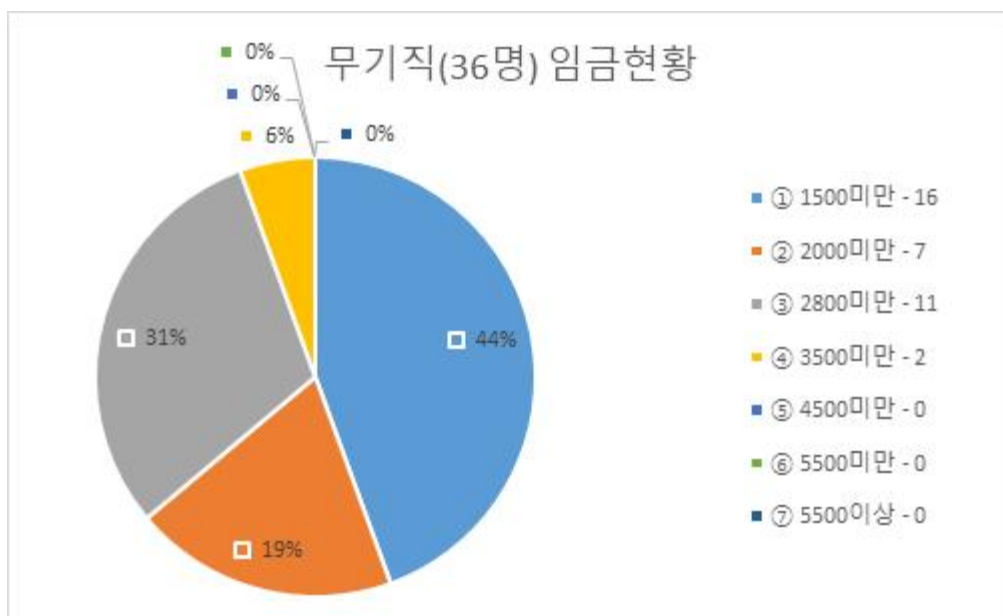


그림 9 무기계약직 임금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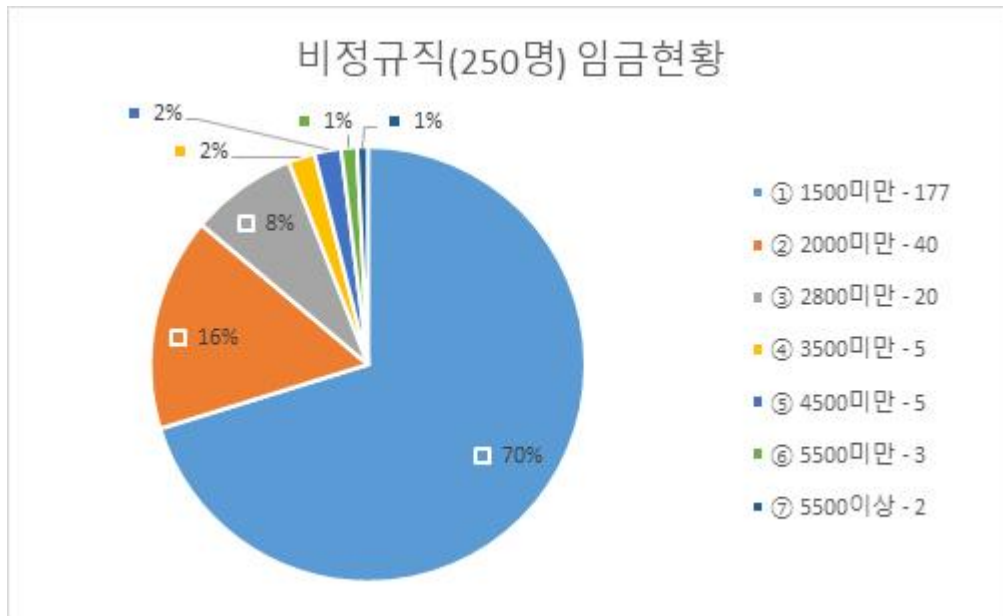


그림 10 비정규직 임금현황 (단위 : 명)

8) 직업별 분류

- 직업분류상 26%가 서비스 직군으로 분류되었고 그 다음이 기타가 26%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계층의 직업이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는 서비스관련 형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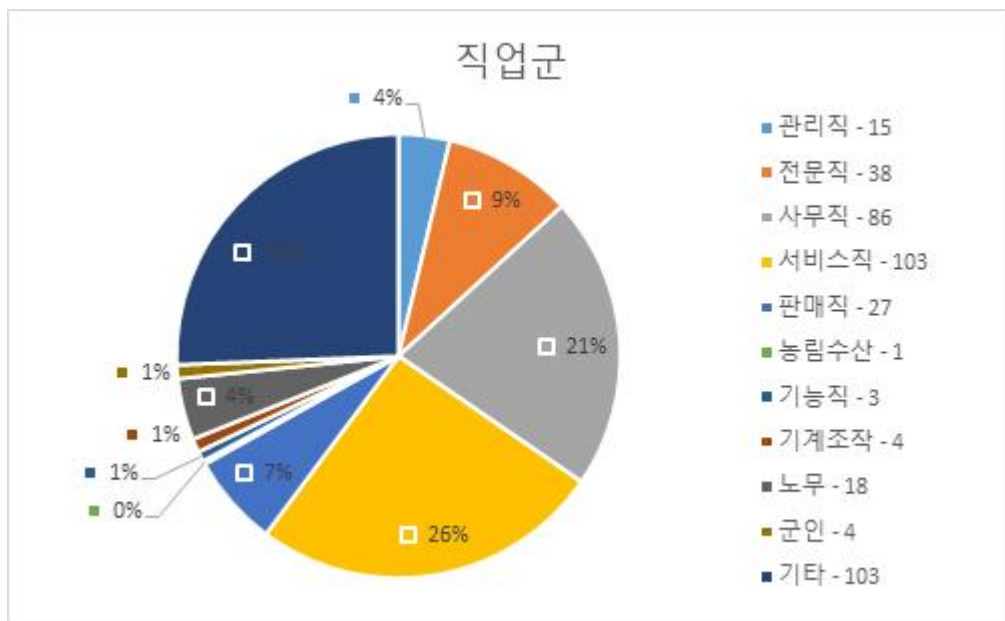


그림 11 직업별 분류 (응답 402명, 단위 : 명)

9) 평균노동시간

- 1일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 이상(6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시간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노동자의 비율(37%)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당 근무일수와 비교했을 때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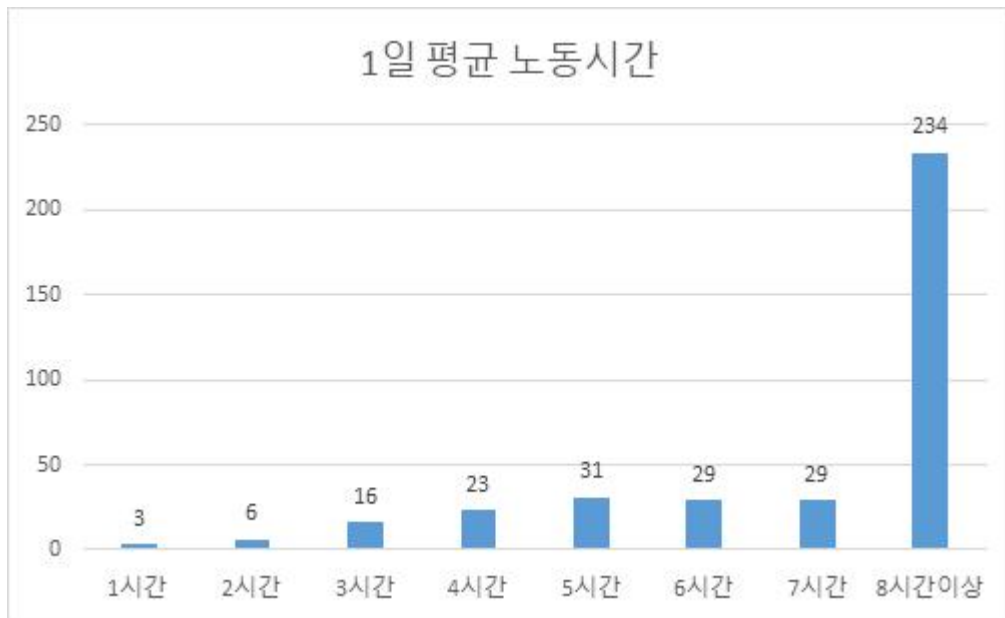


그림 12 1일 평균노동시간 (응답 402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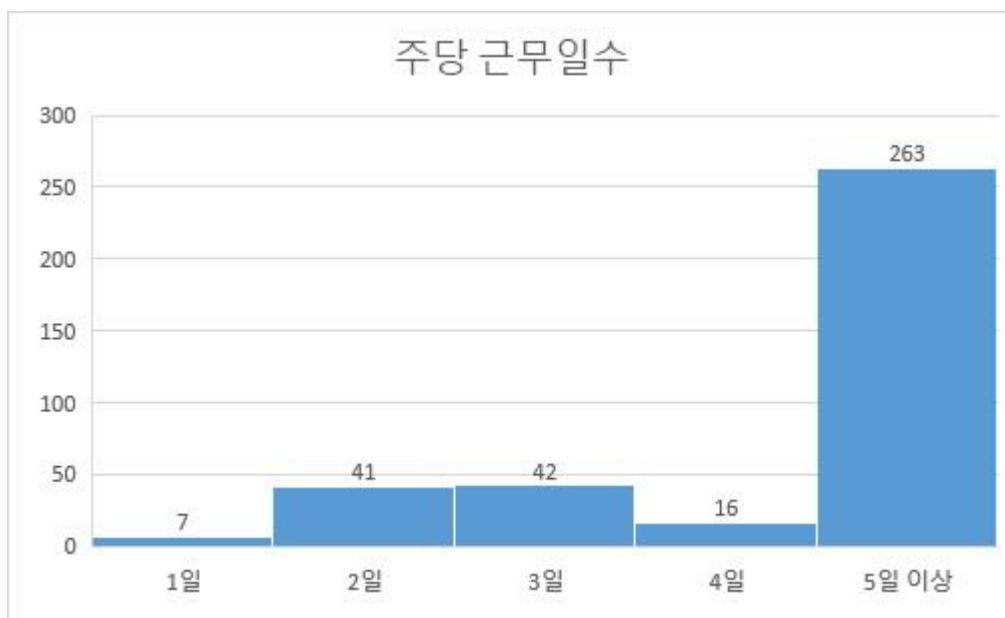


그림 13 주당 근무일수 (응답 369명, 단위 : 명)

10) 생활비 지출항목

- 생활지출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비가 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교통비(10%), 주거비(10%), 문화비(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들의 수입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물가 연동에 따라 지출내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저임금형태 노동자가 높게 나타남에도 기초생활비가 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생계형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물가와 주거비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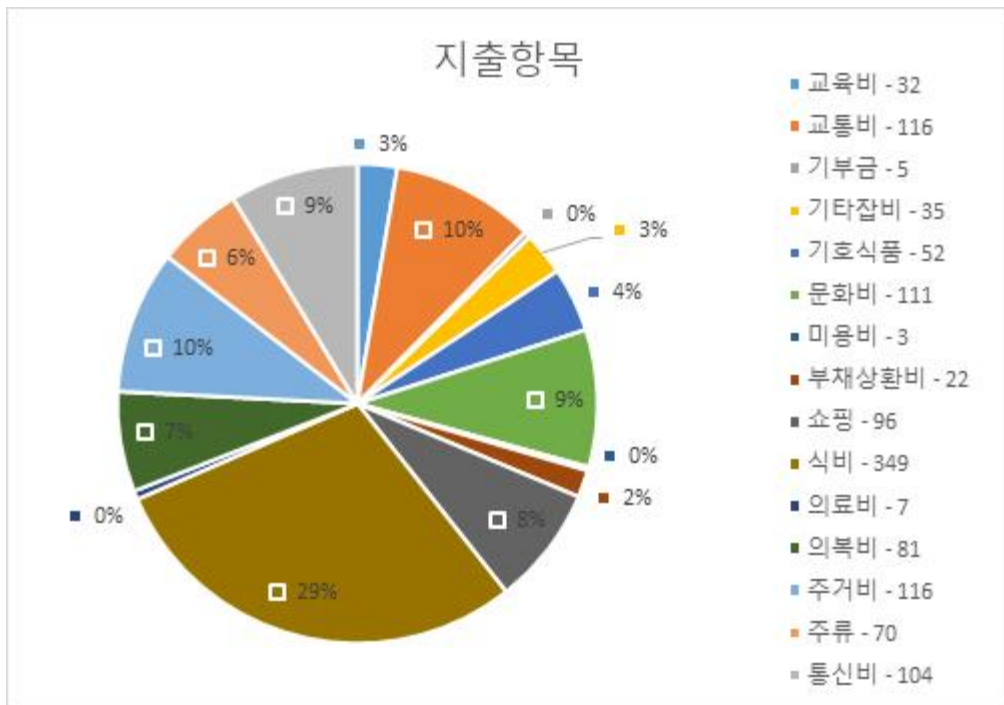


그림 14 생활비 지출항목 (단위 : 명)

11) 취업정보

- 취업정보의 취득은 친구, 선·후배를 통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26%), 온라인 (19%), 선생님(11%), 가족(10%)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면 진로프로그램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한 것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구직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취업정보 취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취업정보에 대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를 갓 넘겨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들의 취업프로그램이 보다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 그리고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정보부족(25%), 적성파악(90%), 경력 (18%) 순으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정보와 적성 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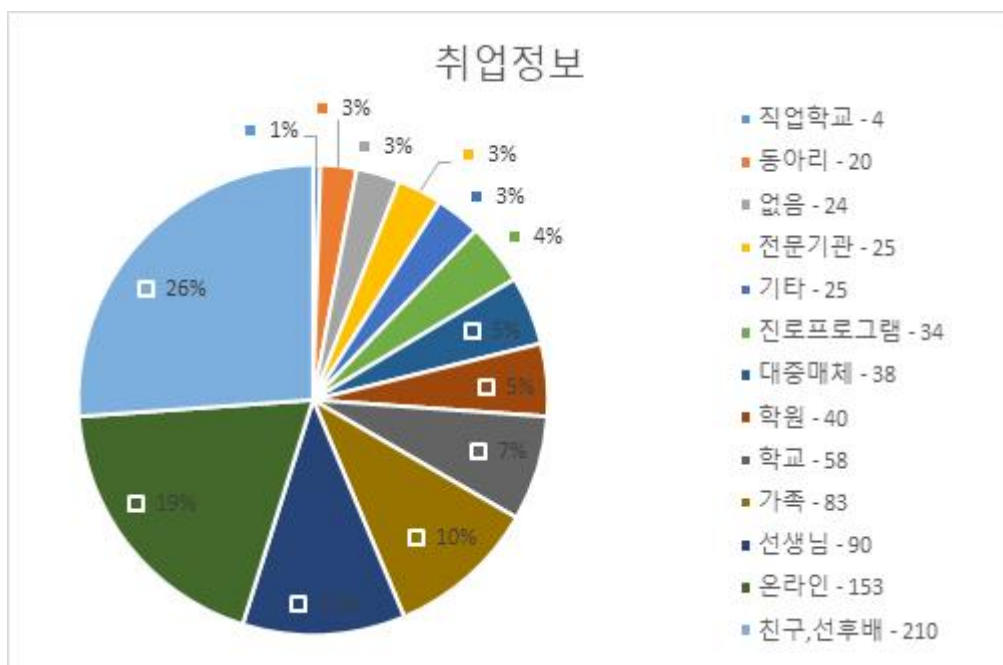


그림 15 취업정보습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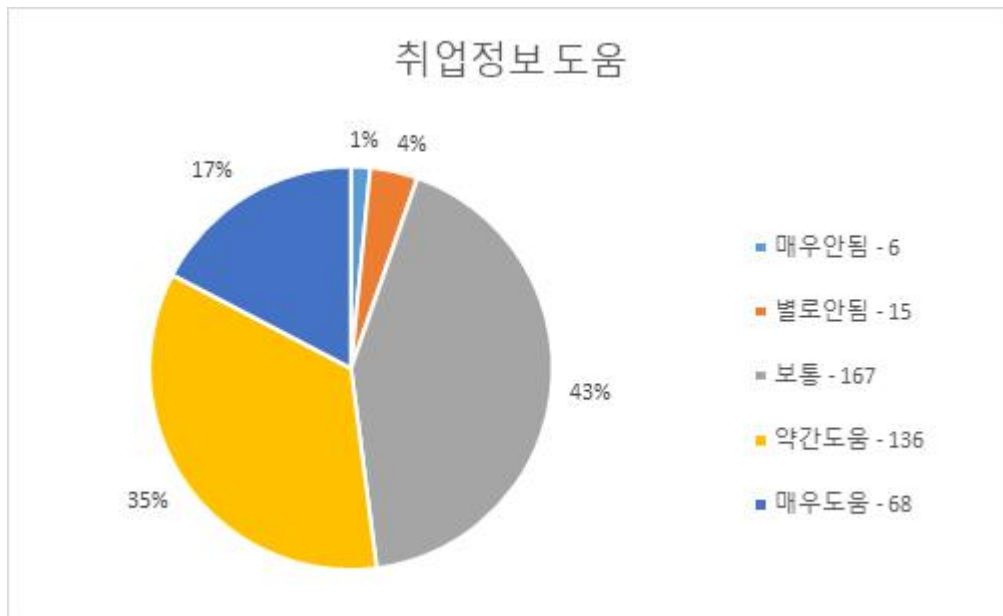


그림 16 취업정보 도움 (응답 392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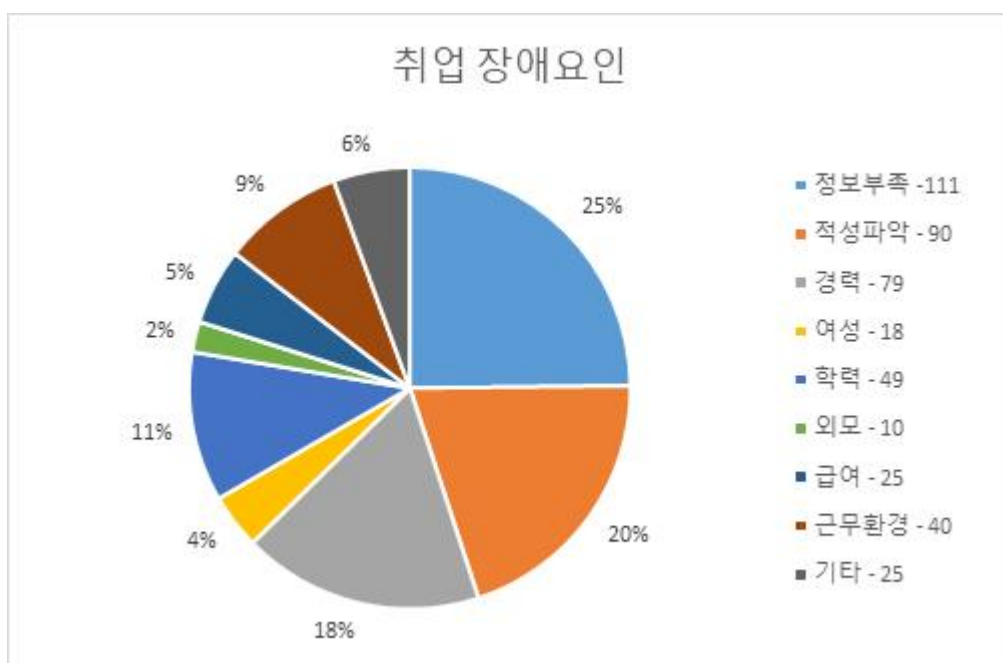


그림 17 취업장애요인 (단위 : 명)

12)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험

- 직장생활 속에서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급노동,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성추행, 폭언 등의 것도 8%에 달했다.
- 또한 사적요구나 인격모독 등의 직장갑질의 요소도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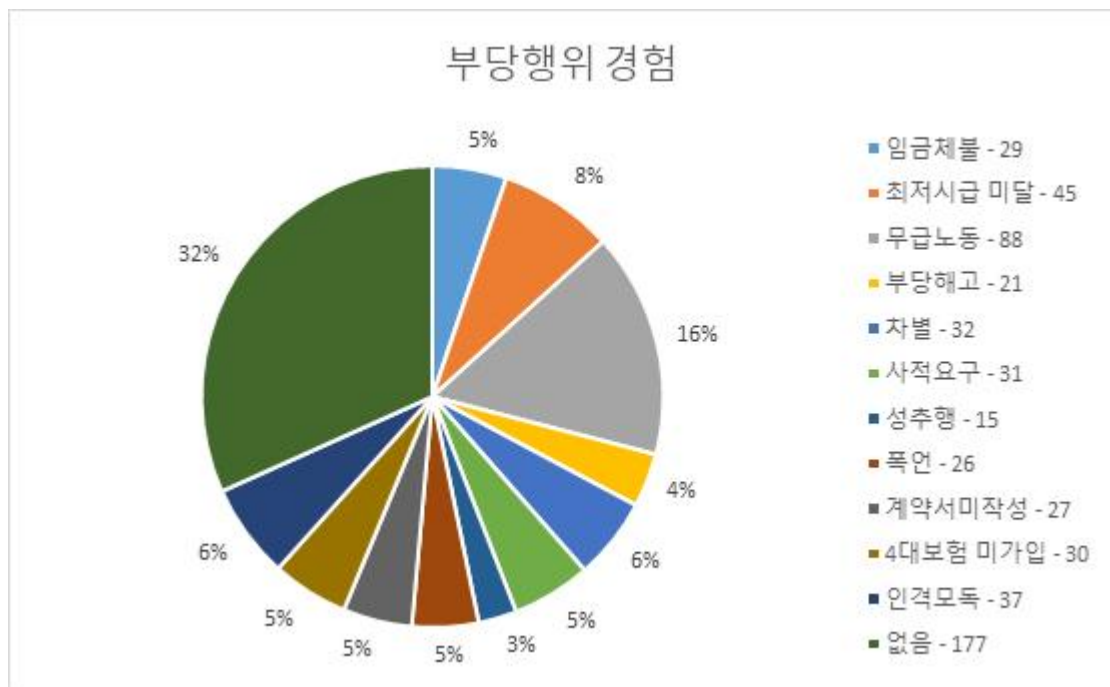


그림 18 부당행위 경험 (단위 : 명)

13) 이직관계

- 이직의 경험은 33%로 타나났고 이직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46%였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20대가 82%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직 경험이 있거나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54%로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안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이직의 사유로는 근로여건의 불만족(35%), 보다는 직장(16%), 재취업(16%), 계약만료(8%)로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과 기간제비정규직 계약 등으로 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이직 이후에 대한 응답에서는 임금은 나아졌다(54%)라고 답변한 대신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다(60%)라고 나타나 기간제 비정규 계약직으로 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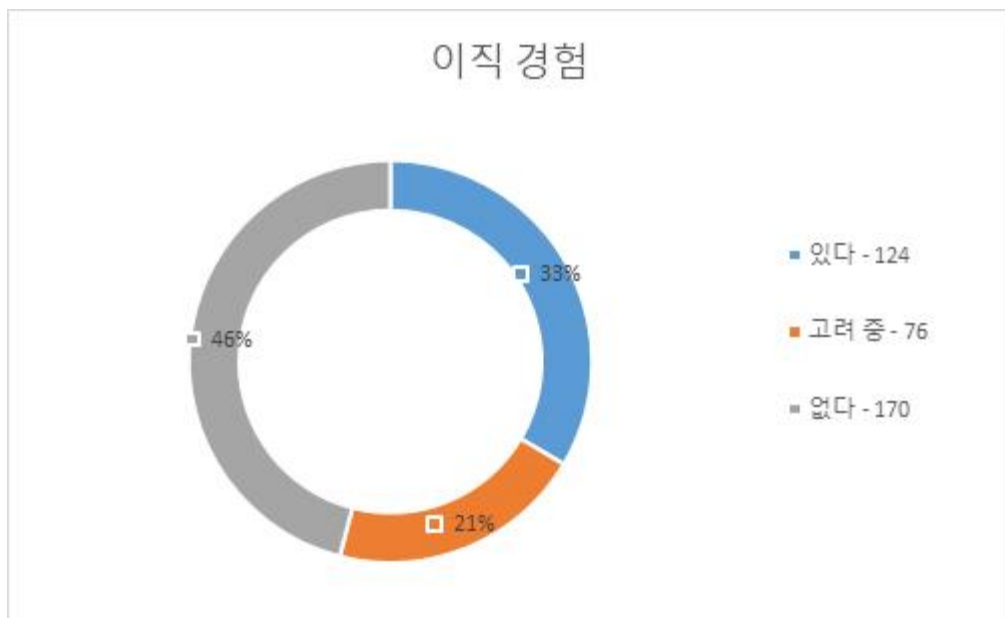


그림 19 이직경험 (응답 370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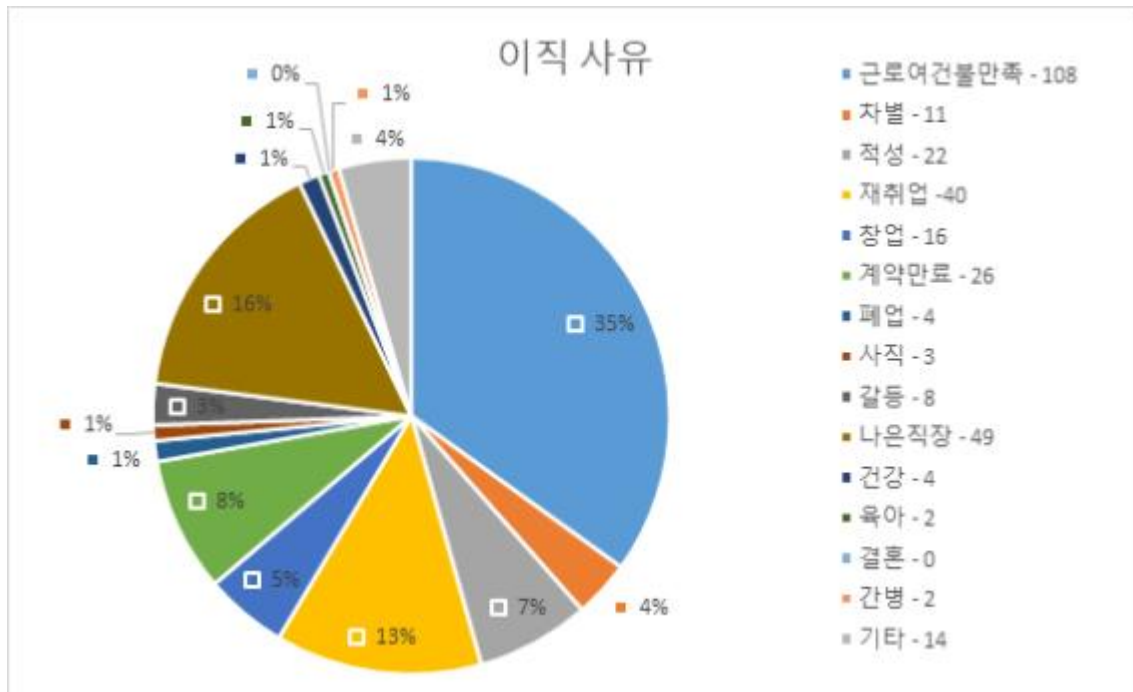


그림 20 이직사유 (응답 309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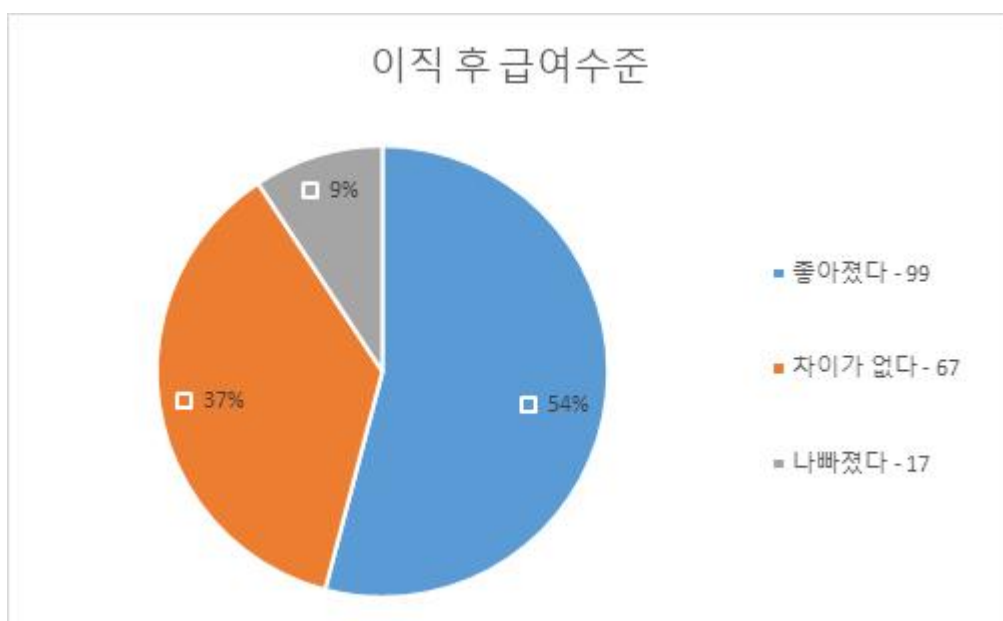


그림 21 이직이후 급여의 수준 (응답 183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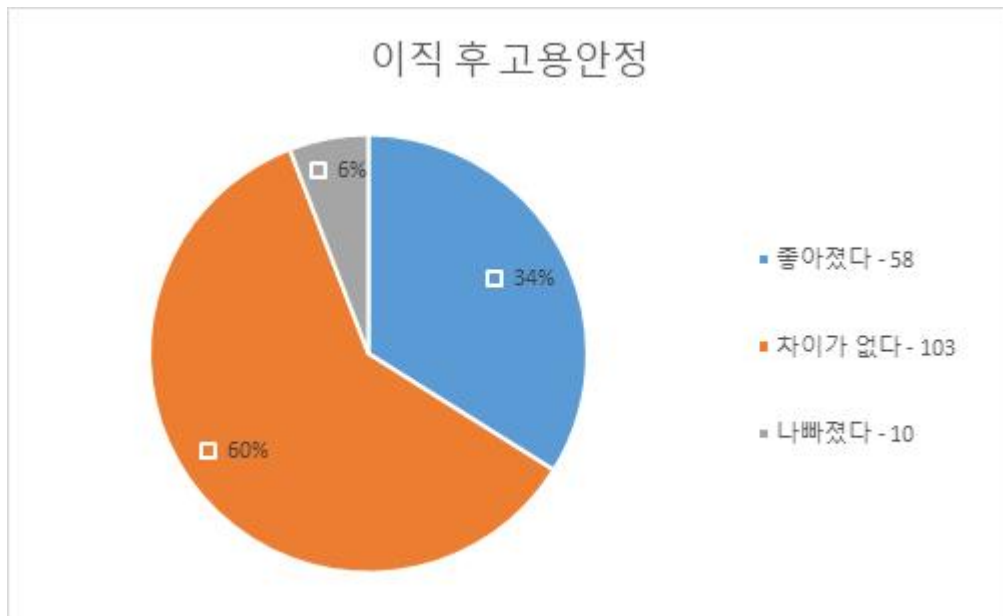


그림 22 이직 이후 고용안정성 (응답 171명, 단위 : 명)

14) 일자리 중요도와 현 근로여건 만족도

-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역시 임금/급여, 고용안정, 근로시간, 근로환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현 한국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특히 일자리 중요도 항목에서 ‘회사의 규모’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언론에서 회자되는 대기업중심의 일자리 욕구는 대전지역 청년노동자의 경우 그리 높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근로여건 만족도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 직장문화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 고용안정, 회사의 성장 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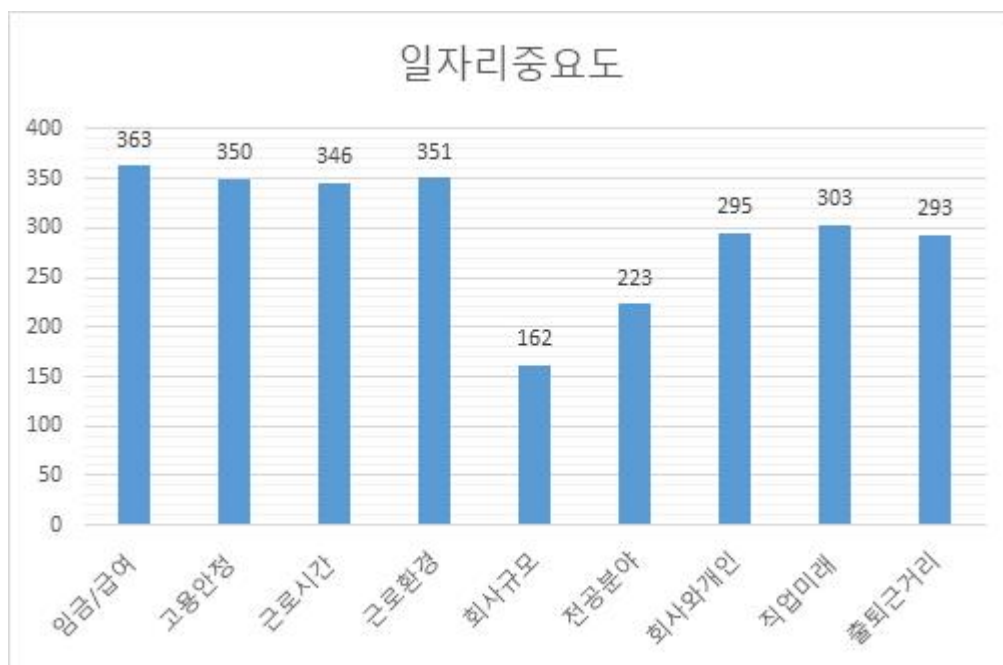


그림 23 일자리 선택 시 중요요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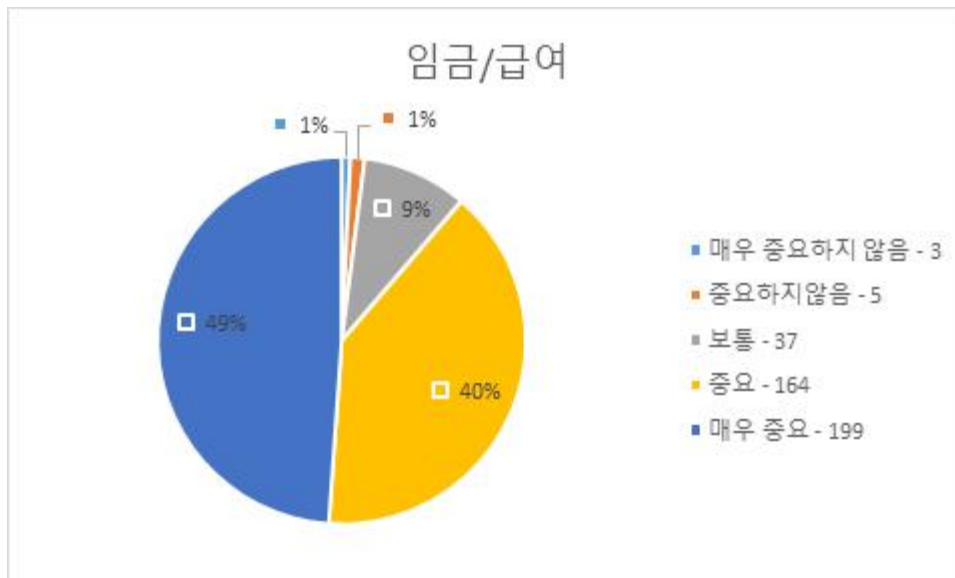


그림 24 임금/급여수준 (응답 399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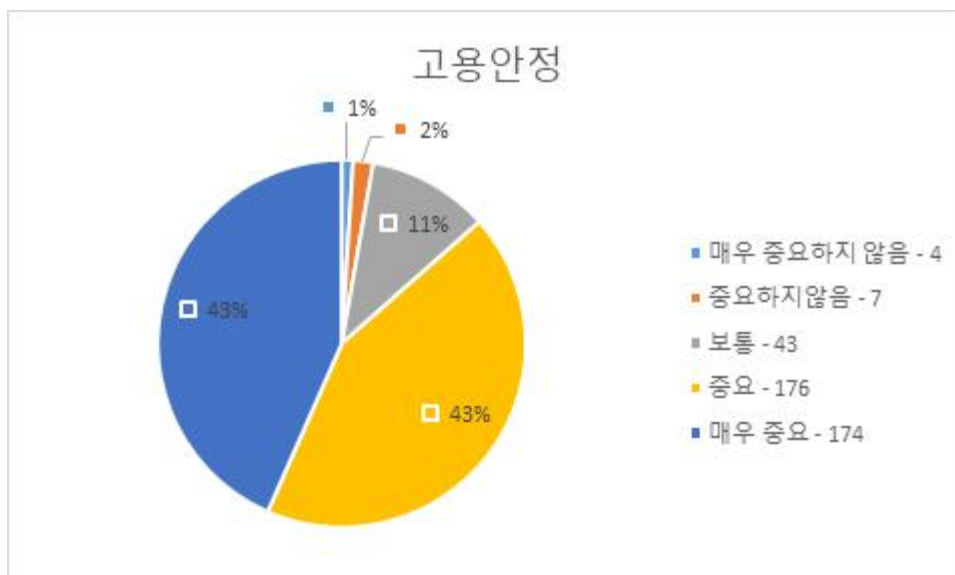


그림 25 고용안정성 (응답 401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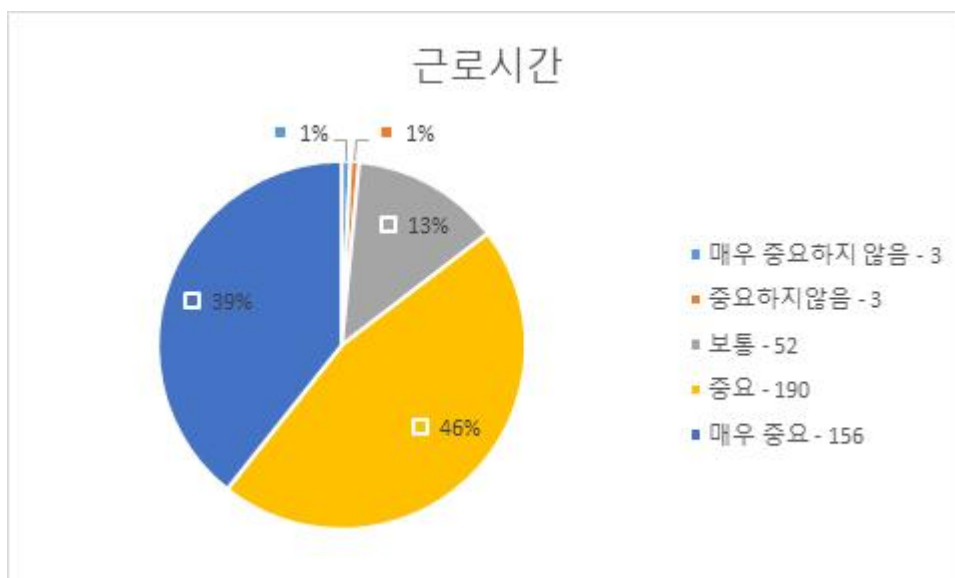


그림 26 근로시간 (응답 397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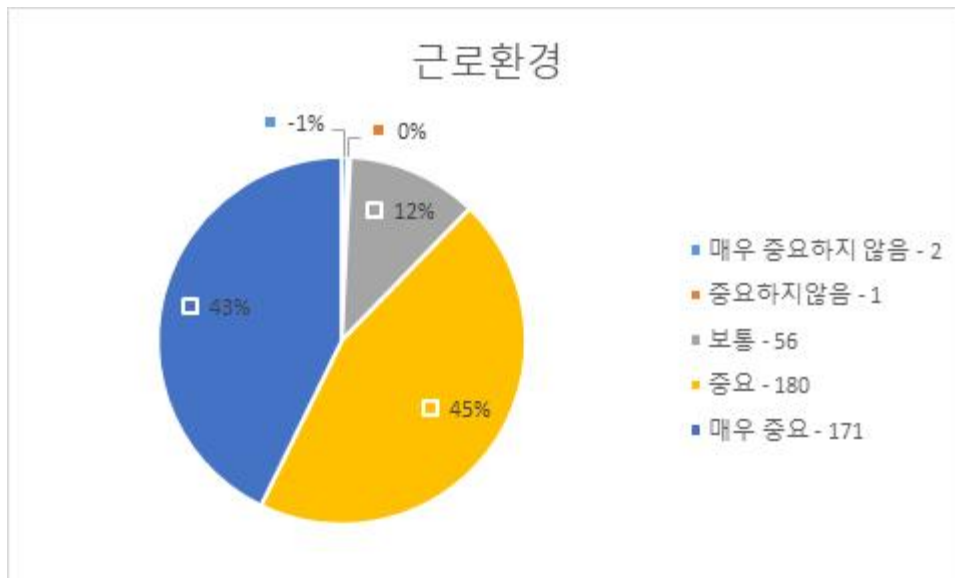


그림 27 근로환경/복리후생 (응답 400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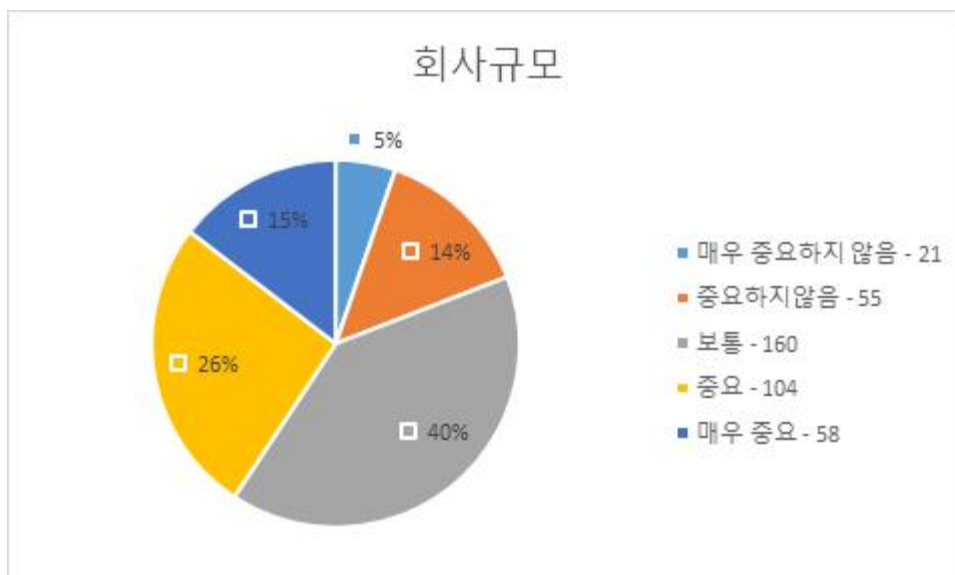


그림 28 회사규모 (응답 398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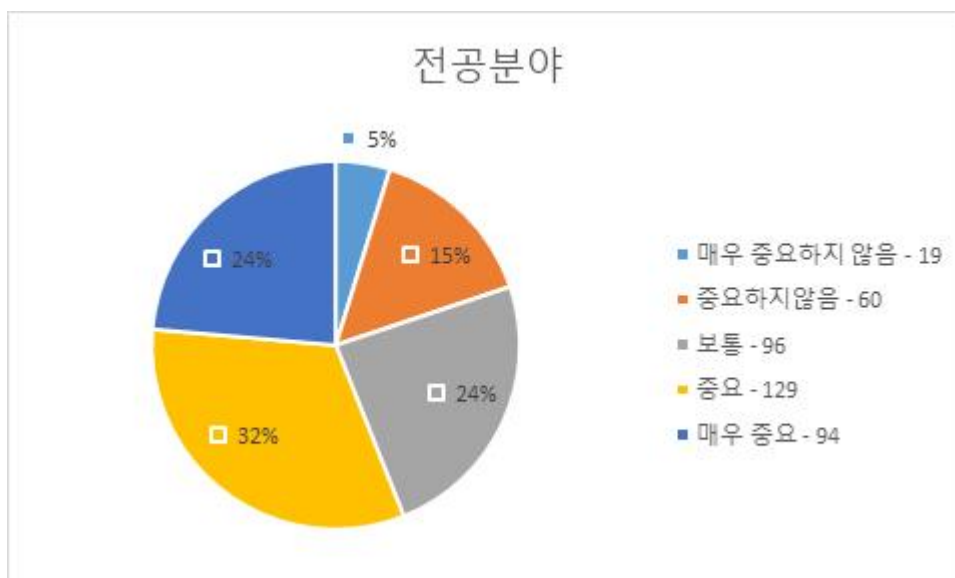


그림 29 전공분야와 관련성 (응답 398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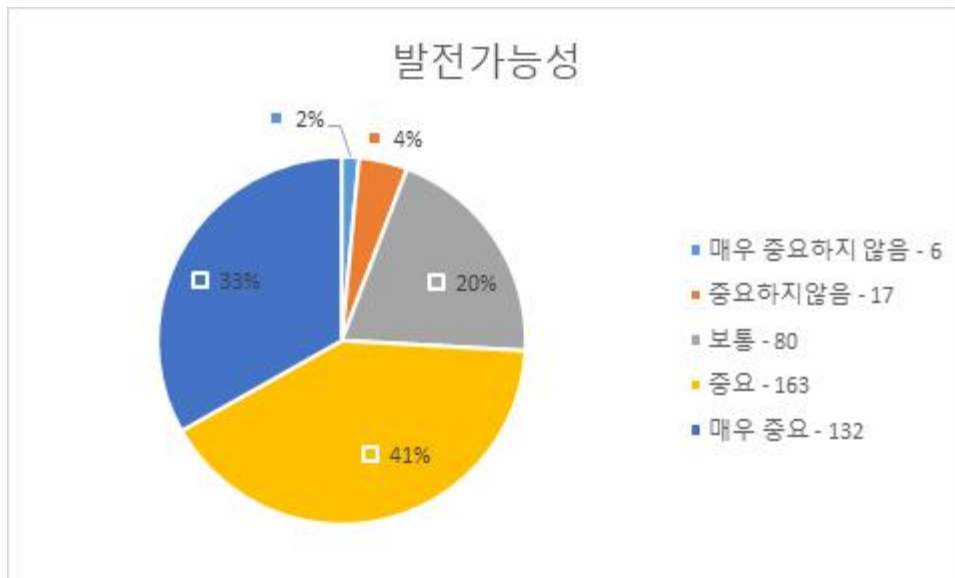


그림 30 회사와 개인의 발전가능성 (응답 398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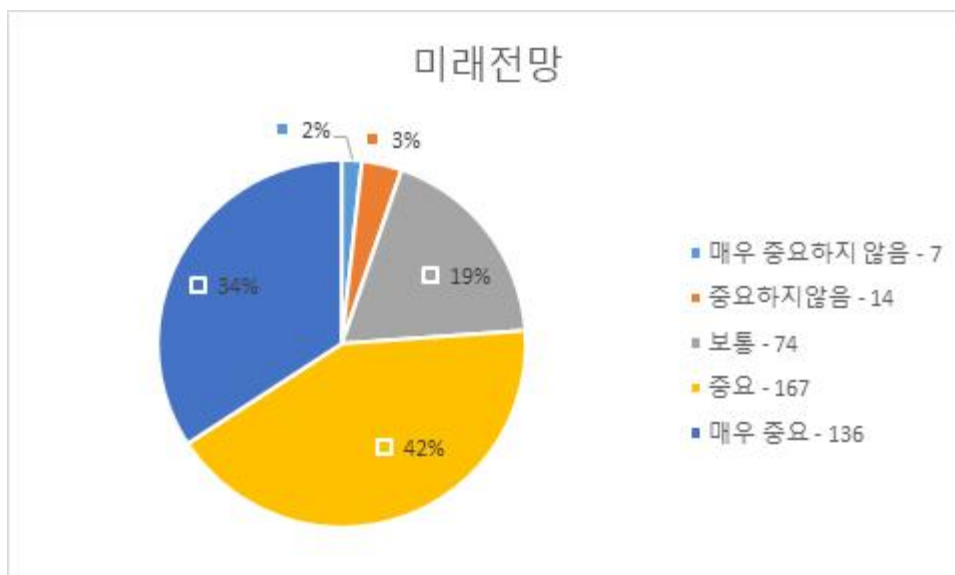


그림 31 직업의 미래전망 (응답 398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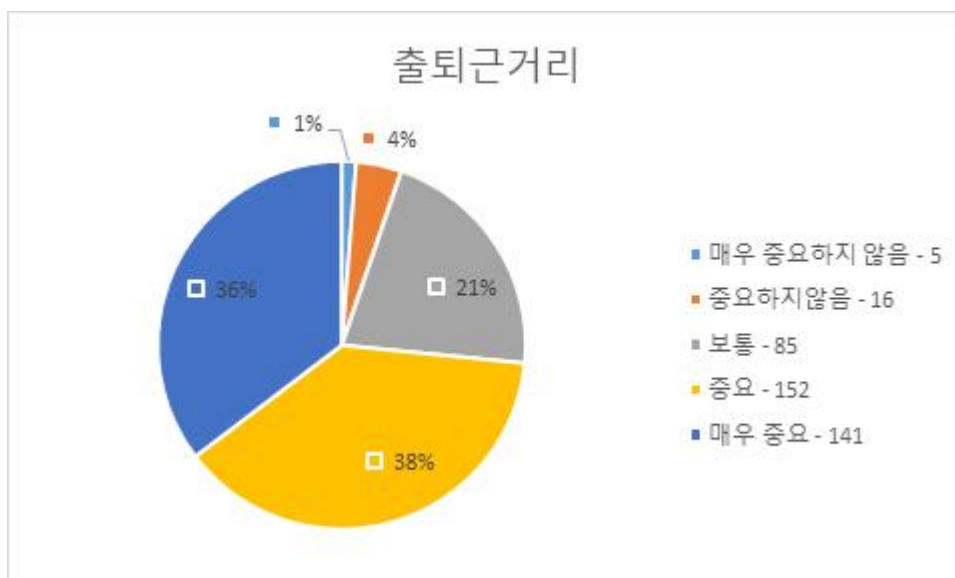


그림 32 출/퇴근 거리 (응답 399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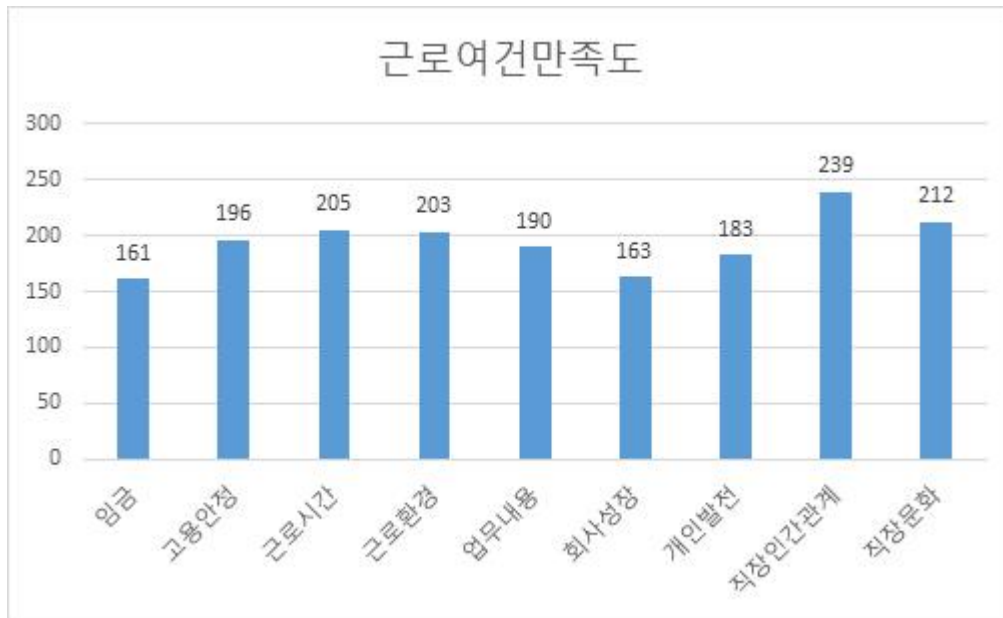


그림 33 현 직장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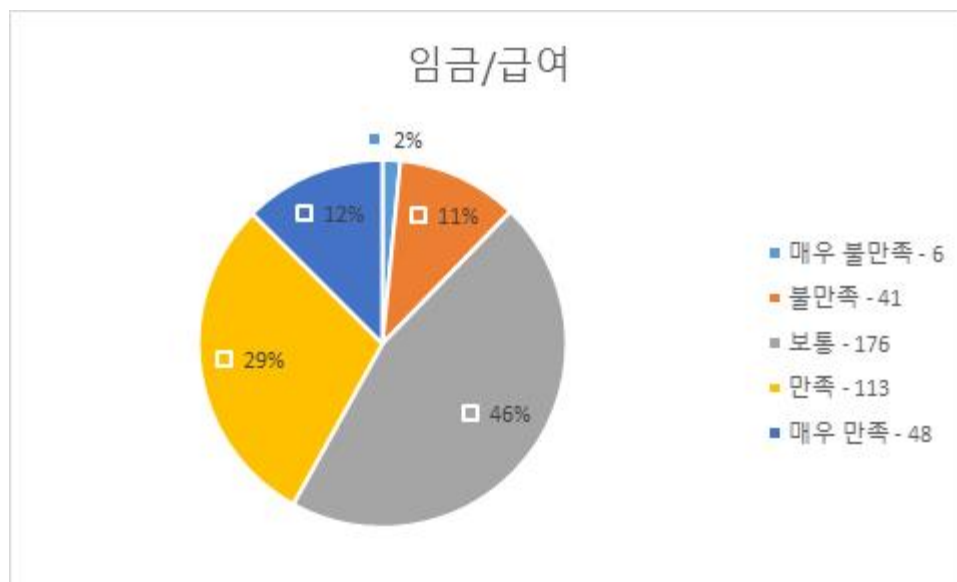


그림 34 임금/급여 (응답 384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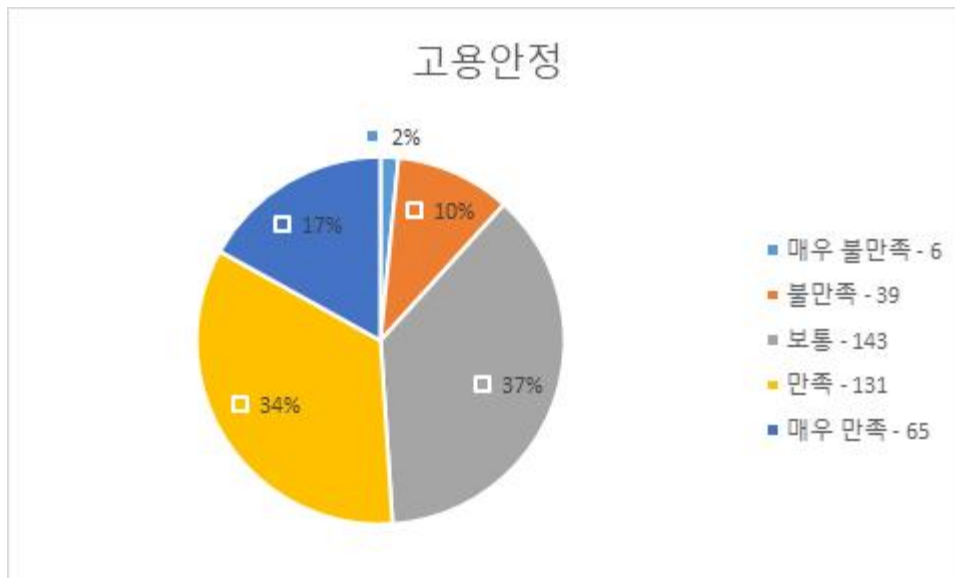


그림 35 고용안정성 (응답 384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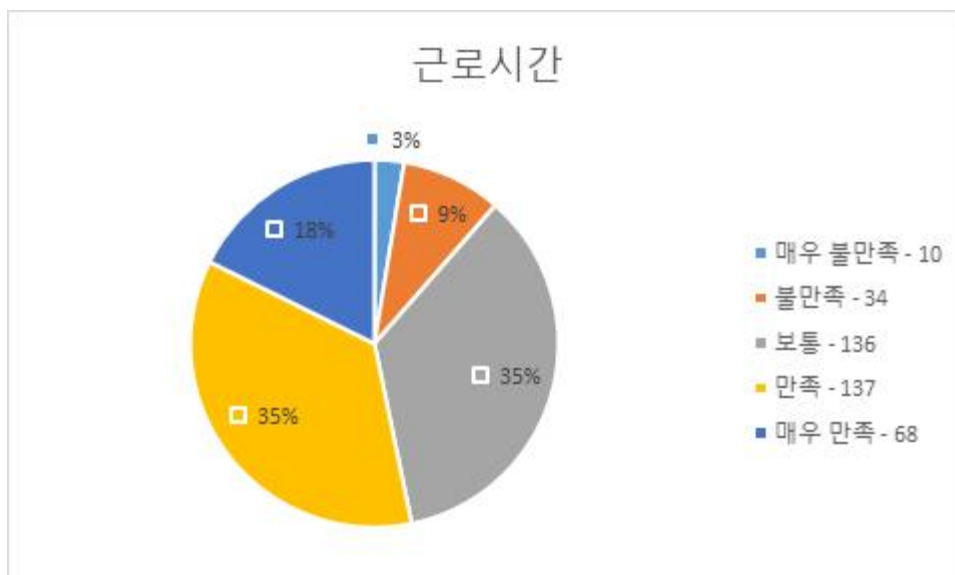


그림 36 근로시간 (응답 385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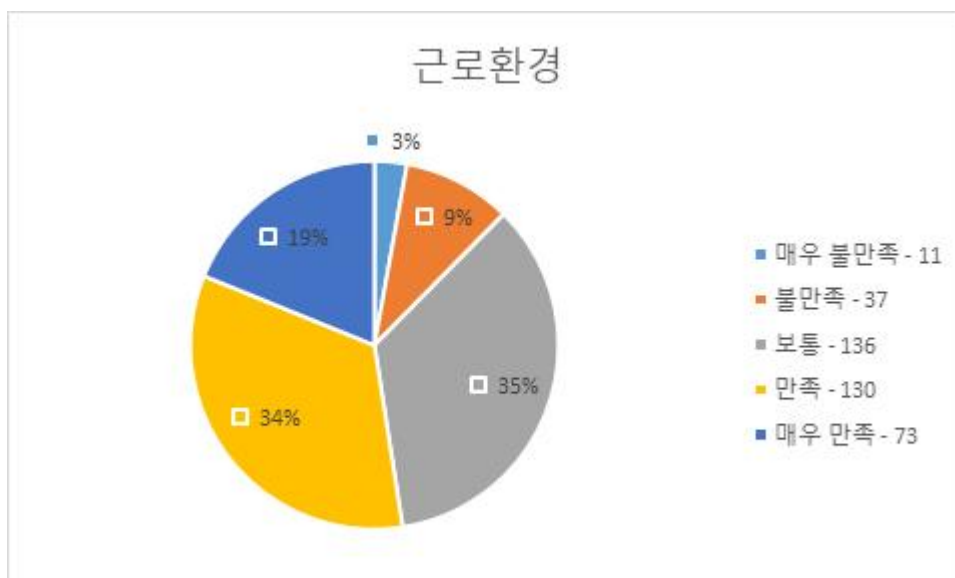


그림 37 근로환경 (응답 387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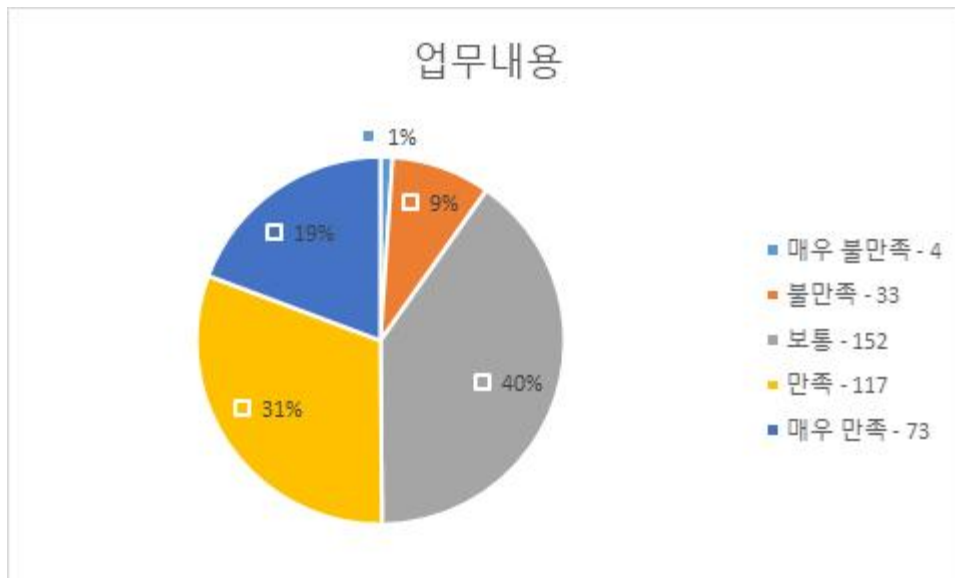


그림 38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성취감 등 (응답 379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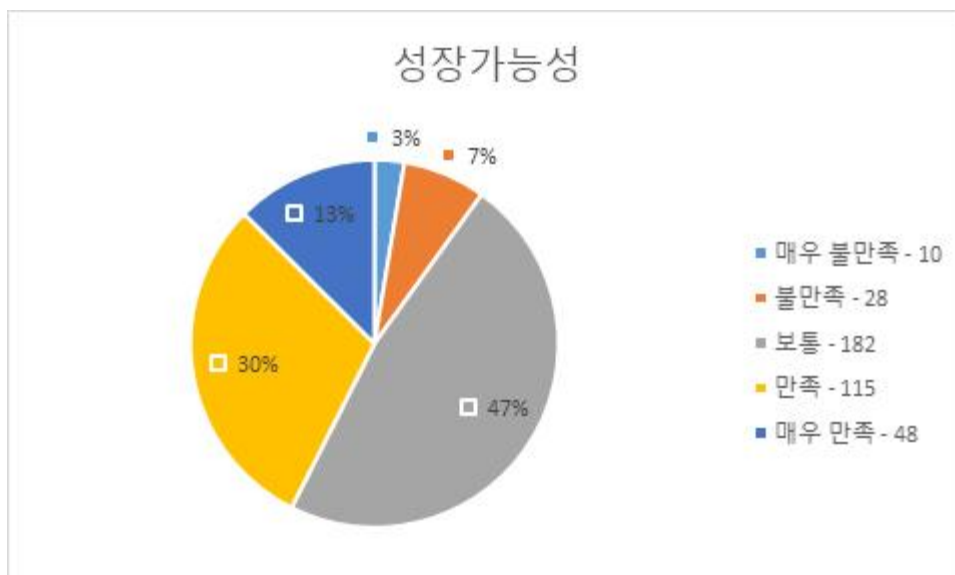


그림 39 회사의 성장가능성 (응답 383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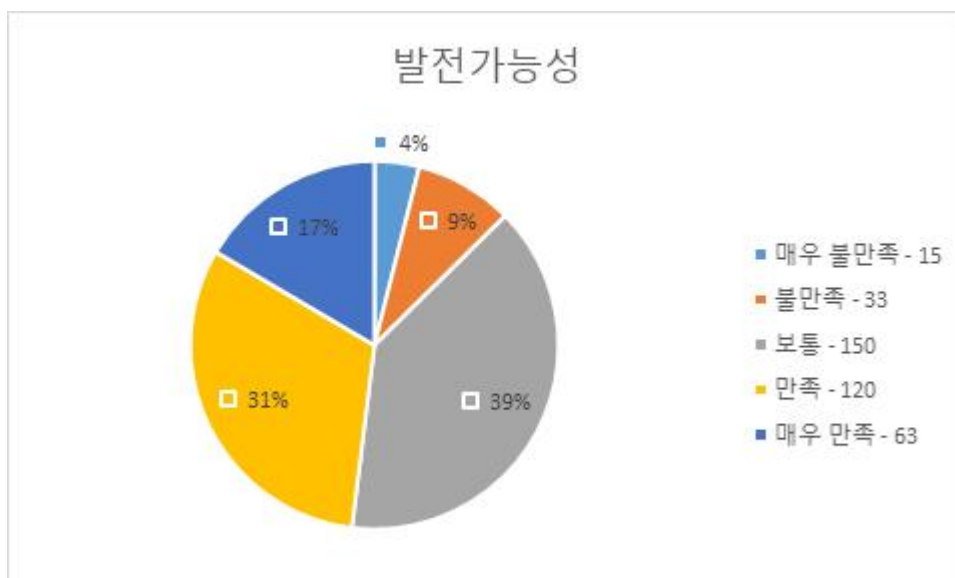


그림 40 개인의 발전가능성 (응답 381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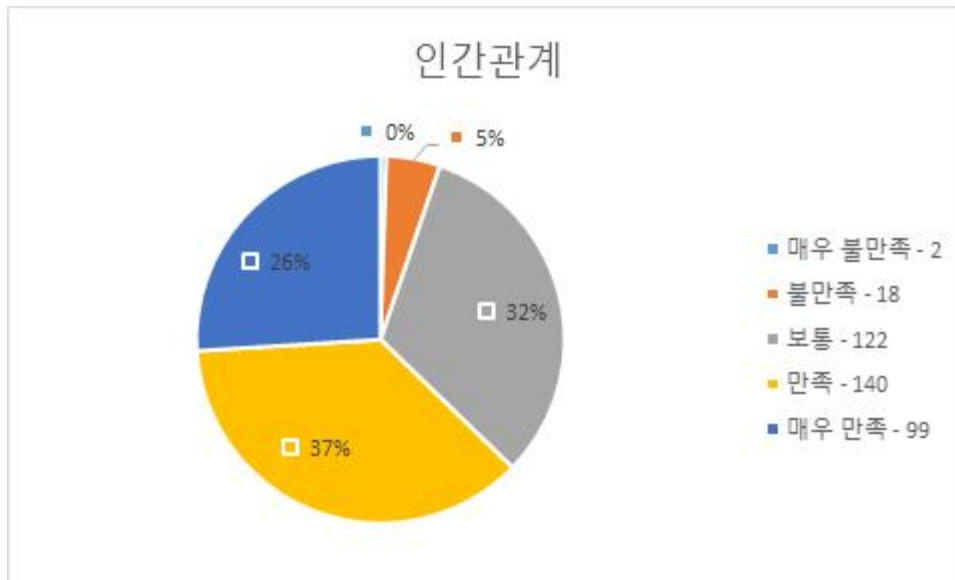


그림 41 직장 내 인간관계 (응답 381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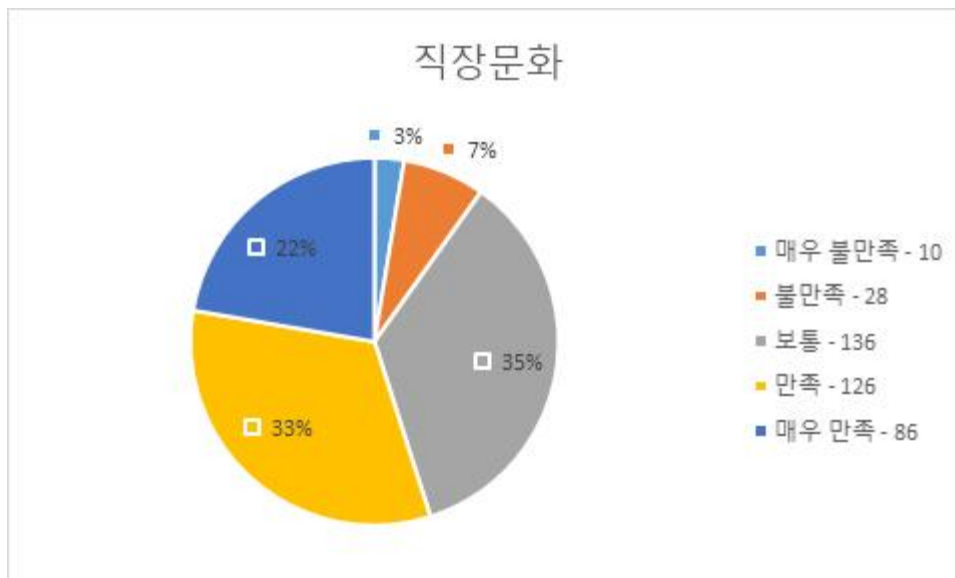


그림 42 직장문화 (응답 386명, 단위 : 명)

15) 청년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희망카드와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처음 들어봤다는 비율이 취업희망카드(49%), 희망통장(53%)로 과반에 달하였고, 알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각각 33%와 31%로 나타났다.
- 이는 청년정책의 홍보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설사 청년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청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만족도 부문에서는 불만족의 비율(12%)이 낮아 이러한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확대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수당(35%), 투자유치(18%), 일자리경험프로그램(17%) 등으로 꿈아 청년취업과 관련한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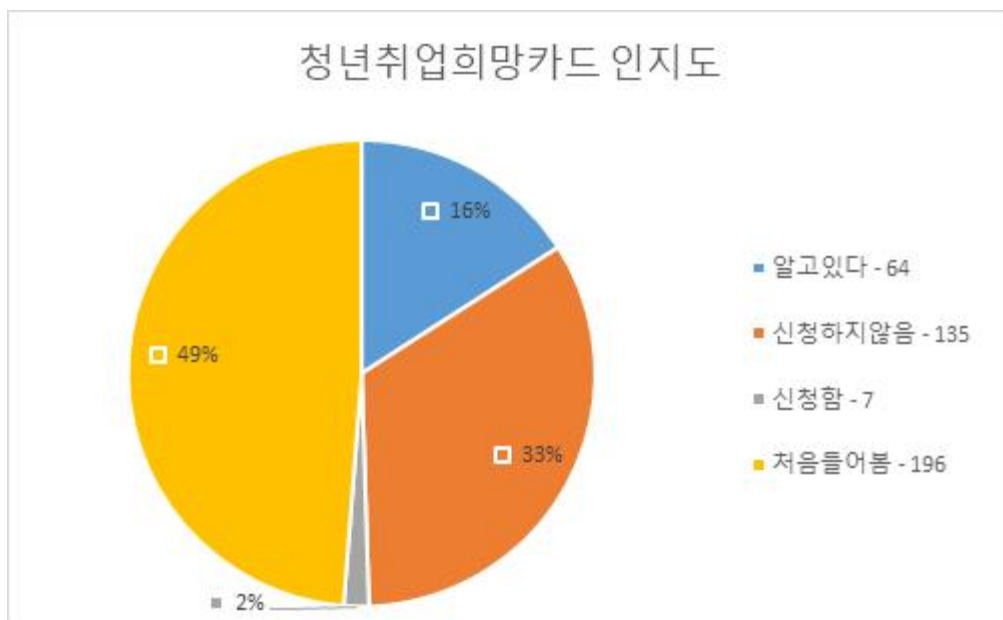


그림 43 청년취업희망카드인지도 (응답 402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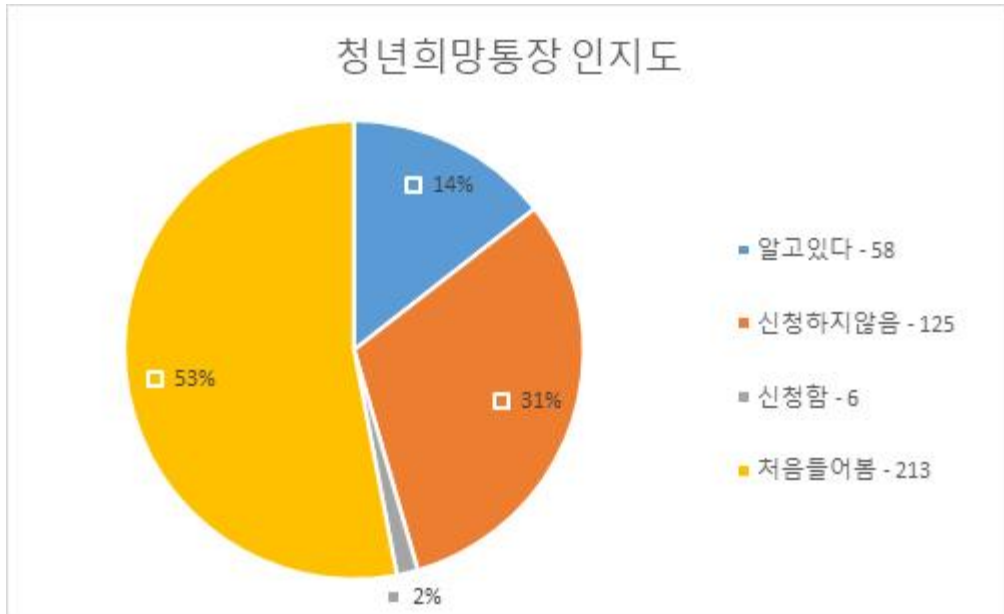


그림 44 청년희망통장 인지도 (응답 402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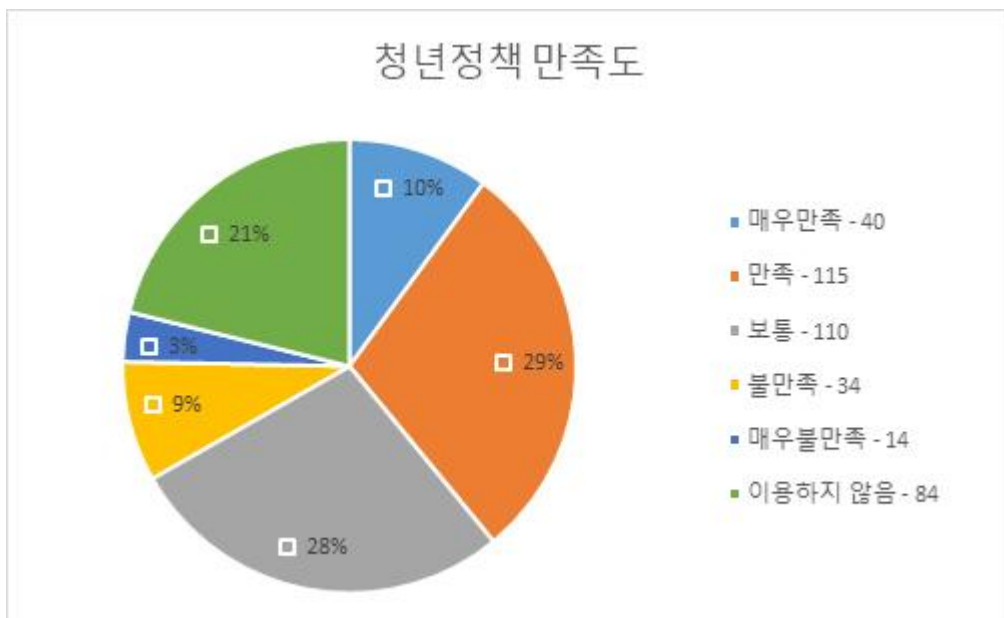


그림 45 청년정책 만족도 (응답 397명, 단위 : 명)

16) 필요한 청년정책

- 대전시 청년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년정책으로는 청년수당(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투자유치(18%), 일자리경험프로그램(17%),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13%) 순이었다.
- 청년수당에 대한 선호도는 언론의 보도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경제상황,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 또한 각종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단기적인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정책이 단기간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고용안정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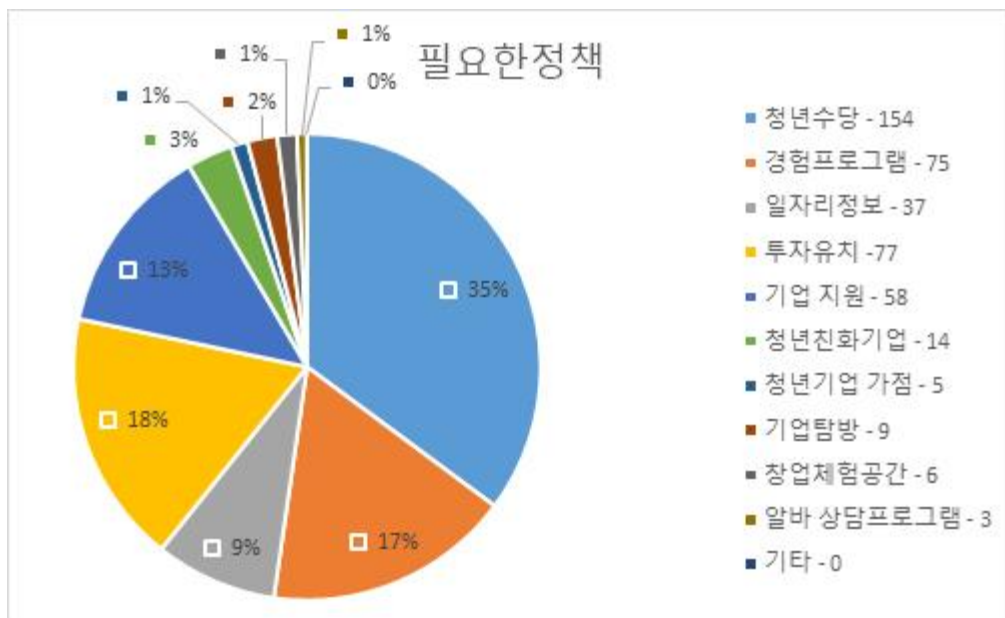


그림 46 필요한 청년정책 선호도 (단위 : 명)

**2018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대안**

1. 청년들의 노동실태 현황

대표적인 취약계층 노동자들로 여성, 청년, 노년을 꼽는다. 특히 청년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배경이 매우 다양하면서 중첩되어 있다. 청년들은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욕구도 다양하다. 경제활동상태도 학업중이면서 취업상태이거나, 취업준비중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다. 또 청년문제는 고용, 실업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문제, 건강문제,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실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 청년고용과 실업문제는 연령별, 학력별로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율이 높다는 것은 졸업 후 장기간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노동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청년노동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에서 신규 실업자, 장기간실업자에 대한 대안이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하다.

연령 별	수학 여부	2016년 5월			2017년 5월			2018년 5월		
연령 별	수학 여부	청년 총 인구	고용 률	실업 률	청년 총 인구	고용 률	실업 률	청년 총 인구	고용 률	실업 률
* 15~ 29세	전체	9378	42.1	9.7	9302	43	9.2	9157	42.7	10.5
	졸업/ 중퇴	4643	69.7	9.9	4730	69.5	9.4	4788	68.9	10.9
	재학/ 휴학	4731	15	8.9	4569	15.7	8.3	4368	13.9	8.6
	기타	4	17.6	0	3	0	0	1	0	0
15~ 19세	전체	3085	7.6	10.7	2944	9.3	5.8	2775	7.4	9
	졸업/ 중퇴	282	35.2	20.7	280	42	10.5	273	34.3	13.7
	재학/ 휴학	2803	4.8	1.6	2665	5.9	2	2502	4.5	4.6
	기타	-	-	-	-	-	-	-	-	-
20~ 24세	전체	3052	47.1	10.2	3035	46.4	11.1	2961	43.9	11.2
	졸업/ 중퇴	1513	68.1	10.4	1525	65.3	12.2	1441	64.3	12.5
	재학/ 휴학	1539	26.3	9.6	1510	27.2	8.1	1520	24.6	7.6
	기타	-	-	-	-	-	-	-	-	-
25~ 29세	전체	3241	70.4	9.3	3323	69.8	8.5	3421	70.2	10.3
	졸업/ 중퇴	2848	74	9	2926	74.2	8	3075	74.2	10.1
	재학/ 휴학	389	44	12.5	394	37.6	14.7	346	35.1	14.6
	기타	4	17.6	0	3	0	0	1	0	0

표 1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2018년 11월

대전지역 청년노동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 고용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0-29세 고용율이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도	연령계층별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전국	계	44038	27775	16263	63.1	61
	15 - 19세	2861	220	2642	7.7	7.2
	20 - 29세	6379	4011	2368	62.9	57.1
	30 - 39세	7452	5821	1631	78.1	75.8
대전광역시	계	1296	793	503	61.2	59.1
	15 - 19세	94	4	90	4.1	4.1
	20 - 29세	225	132	93	58.7	53.5
	30 - 39세	216	166	50	76.9	74.2
울산광역시	계	976	605	371	62	60.2
	15 - 19세	68	4	64	5.9	5.3
	20 - 29세	137	87	50	63.5	59.1
	30 - 39세	177	136	40	77.2	76.1
광주광역시	계	1260	767	494	60.8	59.4
	15 - 19세	98	6	93	5.9	5.8
	20 - 29세	198	109	89	55.1	50.7
	30 - 39세	212	159	54	74.7	73.1

표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4/4분기 행정구역(시/도) 연령별경제활동인구

또 실업율을 보면 통계청자료에 보면 2018년 1/4분기 대전지역 실업율은 4.4%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청년들의 실업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실업자 (천명)	성별 (남자)	성별 (여자)	연령별 (15~29세)	연령별 (30~49세)	연령별 (50세이상)
대전광역시	37	20	17	17	13	7

표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성별/연령별 실업자수 (단위천명) 2018년 1/4분기

결국 대전지역 청년들의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율은 낮고, 실업율은 높다. 전국평균보다도 결코 좋지 못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대전지역 청년들을 위한 노동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 4와 표 5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조사한 ‘청년사회, 경제실태 조사’ 내용이다. 이 조사는 중고등학생들은 응답하지 않은 통계결과이다.

그런데 대전과 충청지역의 청년들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급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고용위기 해법으로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강화’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 ‘청년들의 능력향상과 핵심역량수준제고’가 높게 나온 반면, ‘진로교육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나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병행제도 활성화’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왔다. 이 조사는 고등학생은 제외한 조사이다. 진로교육과 도제학습에 대한 대전 지역의 정책부재 속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고학력 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능력과 핵심역 량 수준 제고	대기업 과 공 공부 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독일 이나 스위 스식 의 일 과 학 습 병 행제 도 활 성화	미취업 청소년 및 청 년 대 상 수 당, 배 당, 급 여지 급
전체	소계	23.4	18	14.8	14.7	14.3	13	1.8
연령 별	만15 -18 세	23.7	24.6	12.9	15.3	10.1	13.4	0
	만19 -29 세	25.1	16.9	15.1	14.2	14.2	12	2.5
	만30 -39 세	21.7	19	14.5	15.1	14.5	13.9	1.3
지역 별	서울	18.4	18.3	17.7	13.3	19.1	11.4	1.7
	인천· 경기	22.6	21.2	13.8	15.7	11.3	13.8	1.6
	대전· 충청· 세종· 강원	27.7	10.8	13.6	17.3	17.6	11.6	1.3
	광주· 전라· 제주	29.3	17.8	9.5	17.9	10.9	11.7	2.8
	부산· 울산· 경남	25.1	16.8	17	11.6	13.6	14.2	1.7
	대구· 경북	22.3	18.9	15.7	11.9	13.3	15	2.9

표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다음으로 표5의 노동수요 측면에서 장 중요한 청소년 고용위기 해법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른 비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 고용확대’나 ‘대기업 청년일자리 확대’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왔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한 확대’나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확대’등에 비교적 높은 조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에 대기업이 없기는 하지만, 의외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창 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부 문채용 확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근로시 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피 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취 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연령 별	만15-18세	25.1	12.2	16.7	21.7	12.4	0	11.9	0
	만19-29세	30.3	20.2	15.2	14.9	10.6	5.3	3	0.6
	만30-39세	34	17	14.2	14	12.6	5.2	2.9	0.1
지역 별	서울	27.3	21.4	16	16	11.5	5.7	1.4	0.7
	인천·경기	33.6	17.1	15.8	12.2	12.6	5.5	2.7	0.5
	대전·충청·세종·강원	36.7	16.1	11	6.6	17	6.3	6.2	0
	광주·전라·제주	32.7	19.9	15.5	14.2	9.6	4	4	0
	부산·울산·경남	29.3	23.1	12.5	17.3	9.1	5.5	2.8	0.2
	대구·경북	34.7	11.6	15.7	26.4	6.6	2.5	2.5	0

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전국 고용현황과 지역 청년들의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듯이 대전지역의 청년노동현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전지역 청년노동의 실태를 파악하

고, 청년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실을 진단해 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청년노동정책 진단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전광역시 청년노동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2. 실태조사 연구요약

○ 실태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년고용의 현황이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2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청년고용의 문제가 심각함을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 청년노동자의 대부분이 저임금노동자

하루 주 8시간 노동하는 138명중에 1500만원미만이 41명, 1500-2000만원 사이가 3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38명중 74명이 200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주 40시간 청년노동자들의 대부분이 200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중 30%가 2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무기계약직은 54%, 기간제는 70%가 2천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급여수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노동
1500만원미만	7	15	47	77
1500-2000만원미만	22	7	29	5
2000-2800만원미만	36	11	13	1
2800-3500만원미만	2	2	1	

표 6 고용형태별 급여수준 (단위 명)

○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임금,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그 다음이 근로시간과 출퇴근거리 그리고 다음이 미래전망과 발전가능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 현재 청년들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일자리 수준을 보고 취업을 선택하고 있었다. 정규직인 청년노동자들도 임금, 고용안정 순으

로 일자리를 선택하였으며, 미래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현재 청년일자리들이 미래전망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청년일자리들이 차별이 없음으로 인해, 결국 청년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일자리의 질에 대해 더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를 보고 일자리를 선택하기에는 현재의 일자리들이 변별력이 없거나, 생계형 일자리 찾기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비가 2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통비, 주거비가 각 10%, 통신비, 문화비가 각 9%, 쇼핑이 8%, 의복비 7%로 지출되고 있었다. 교육비 등은 3%정도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출항목들을 보면 청년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 보니,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은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인 생활비로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취업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친구, 선후배 주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각종 취업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청년들이 42%, 보통이 43%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취업정보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많아 보인다. 특히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을 꼽고 있어 취업정보 전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 장애요인으로 본인의 적성파악과 경력부분을 꼽고 있어 청년들에게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등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직장 내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임금,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순으로 만족도가 낮고 근로환경, 시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임금노동자들이 많다보니, 당연히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일자리가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 관계 만족도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404명중 227명이 부당노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56%가 부당노동을 경험했고, 가장 높은 것이 임금관련 부당노동으로 전체 부당노동 경험의 43%가 임금과 관련한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27명중에 평균 1.7 가지의 부당노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부당노동을 경험한 청년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부당노동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저임금노동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청년들의 고충은 중첩되고 있다.

○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54%가 이직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사유로는 근로여건불만족과 더 나은 직장, 재취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급여수준은 54%만 나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9%나 되었다. 더 문제는 고용안정이 좋아짐 경우는 34%밖에 안 되고, 차이가 없음과 오히려 나빠진 경우들이었다. 즉 청년 일자리의 수준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옮겨보지만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취업희망카드를 모르는 청년이 49% 청년희망통장을 모르는 청년이 51%로 응답하여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정책을 잘 모르거나, 불만족을 표시하는 청년들이 33%나 되었다. 반면 긍정적 답변은 39%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정책의 당사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정책의 당사자들을 이끌어내고, 당사자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대전지역의 현실적인 청년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청년정책의 주체인 당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필요한 청년정책으로 일순위는 청년수당(35%)이다. 다음이 투자유치(18%),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해 달라고는 요구이며, 경험프로그램(17%), 기업지원(13%), 일자리정보(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청년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도 살펴보고, 서울과 성남의 청년정책, 각 지방정부의 청년정책들을 살펴봄에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요구들이 높아, 단기성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창업보다는 직업교육이나 고용서비스지원 등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청년노동 정책대안

1) 정부의 청년노동정책에 대하여

① 청년 저임금문제 해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노동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일자리임을 상당수이다. 해마다 6월이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 여성, 노년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게 최저임금 인상은 급여인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청년들 역시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다 보니, 지출항목에서 기초적인 생활비 비용으로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청년들의 수입을 늘리고, 소비와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올해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을 2023까지 연장하였고,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현재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는 외면 받아 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의원이 밝힌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들조차 청년들을 외면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이행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다. 문재인정부에선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행하지 않는 제도는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부터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분류	년도	대상 기관		미이행기관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청년 채용목표 합계(A)	청년 채용실적 합계(B)	청년 채용감소 합계(A-B)
공공기관	'16년	279	(100.0)	48	(17.2)	2,188	1,419	△769
	'15년	276	(100.0)	66	(23.9)	2,319	1,020	△1,299
	'14년	270	(100.0)	50	(18.5)	1,745	887	△858
지방공기업	'16년	130	(100.0)	34	(26.2)	205	107	△98
	'15년	132	(100.0)	56	(42.4)	767	185	△582
	'14년	121	(100.0)	59	(48.8)	762	292	△470
소계								△4,076

※ 미이행기관 각각 청년채용목표, 청년채용실적, 청년채용감소분을 산출하여 재구성함.

그림 47 신보라 의원 2017년 국정감사자료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신직업 창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직업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청년층을 위시한 구직자들의 추가고용 가능성을 넓혀야 할 것이다.

③ 부당노동행위 근절

○ 임금체불 긴급지원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여주듯이 부당노동행위 41%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다. 청년들의 임금체불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임금체불을 피해자인 노동자가 증명해 내야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확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사항은 강력한 지도단속과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임금체불 현장에서 계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후 실업자로 있는 청년들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임금과 근로환경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가 대기업, 공공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 임금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격차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적극적인 권리구제 사업이 필요

청년들의 부당노동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상담 활동을 확대하고, 청년노동 일자리 창출에 노동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산업단지, 학교, 주요거리 등에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상담’ 활동을 통해, 부당노동에 대한 교육과 대처방안 등을 상담해 주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하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벌여 나가야 한다. 현장방문을 통한 노동권보호와 현장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행정이 사후감독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청년들의 노동인식과 관점에 대한 재인식필요

청년들의 올바른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필요하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시기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을 귀천으로 나누거나, 육체노동을 평가

절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도록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권을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⑤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는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이 짧고 지급수준도 낮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청년들에게 실업급여제도 개선은 시급하다.

우선 현행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90일-240일을 180-360일로 확대시켜 줘야 한다. 또한 현재 6만원인 상한액을 최저임금 1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성실하게 취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자발적 이직율이 높은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발적 이직율이 높고,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미취업자,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단시간노동자, 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대전광역시의 청년정책대안에 대하여

① 중장기 청년노동정책 수립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정책들의 대부분이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단기성과 중심의 직접 일자리 사업들의 비중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청년들은 생계중심형 취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미래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불만족이 높듯이 청년들의 현재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은 현실에서,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은 재고해 볼 필요가 한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 평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추진사업들 중에 청년사업을 끼어넣기식으로 해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올해 ‘청기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학교졸업 이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직접 일을 경험하면서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보니,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② 공공기관의 선도적 좋은 일자리 마련 필요

공공기관들이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개별 기관들이 생색내기식 추진보다는 안정된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된다. 현재 대전시와 산하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대상만을 선정하여 전환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 이미 여러 기관들에서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많은 광역시도에서 이미 1만원 이상으로 생활임금이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2019년 9600원으로 결정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대부분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여성, 청년, 노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지고 있는데, 물론 임금만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너무 낮은 인상율을 보여준 아쉬움이 있다.

③ 새로운 청년고용정책 필요

청년고용할당제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전시 산하기관들의 이행율에 대한 점검과 기관들의 이행 의무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 평가시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여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현재 있는 불안정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환경 개선지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고용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취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소규모사업장들의 근로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좋은 일자리로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높은 이직율과 경력단절, 불안정노동을 바꿀 수 있다.

산업단지 내 근무환경개선 사업도 필요하다.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39세 청년 취업자중 약 20%에 이르는 182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안전망과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한 가운데 그나마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근 등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생활기반이 부족한 조건과 문화시설 등의 부재로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문화적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기존 산업단지와 용산동일대의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훈련도 확대시켜 줘야 한다. 건설노조에서 주장하는 ‘건설노동자직업훈련학교’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장년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청년들의 인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노동은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도 꼭 필요한 노동이지만 현장에는 청년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현재의 기능공들이 퇴직하면서 기능공들도 줄어들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정책에서 노동권리 보호와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 교육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법률상담 사업도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병행되어,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는 고용정책으로만 해결 될 수 없다. 주거문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접근속에서 청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최악의 청년실업율과 경제 빈곤속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연애, 결혼, 취업, 육아 등 자신들의 꿈도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을 줄이고 청년중소기업육성하고, 정규직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인하, 결혼, 취업, 주택지원 등 다양한 청년복지정책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청년정책이 곧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정봉, 2017,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윤윤규 외, 2017,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62-170

김종진, 2016, 청년고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붙임자료

1. 웹진 모음
 2. 활동 사진 모음
 - 2-1. 청년노동인권강좌
 - 2-2. 청년노동인권학교
 - 2-3. 청년노동실태조사
 - 2-4. 청년노동정책토론회
 3. 청년노동 실태조사 조사원 활동소감문
 4. 청년노동실태조사 답례품
 5. 청년노동정책토론회 언론기사모음
 6. 청년노동 안심사업장 현판
 7.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지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넙죽이 X 하종강 노동학개론

**일한 만큼
돈·권리
존중받는 법**

1부 넙죽이의 노동생활 (시진필름)
40분 관여, 임희선, 임주, 이종우, 김지, 주지

2부 강연
40분

3부 질의응답
30분



하종강 교수

시간 | 5/22(화) 13시-15시
장소 | 청의관 101호

주최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주관 | 근현대사 다크투어 동아리 KAIST SOCIAL MAKER X 대학원 사회과학 동아리 객

웹진 모음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당신이 알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되는

노동이야기

일시	5월 25일 금요일 18시 30분
장소	자연드림 송촌점 (국민은행 옆)
대상	청년 및 대학생

#나도_몰랐던_나의_권리_보장받는_방법
#직장에서_무시당하지_않는_방법
#나쁜_사장과_싸워서_이기는_방법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웹진 모음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당신은 안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마!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강사: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우리도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졸업 후에는 직장인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기 웹툰 '송곳'의 구고신 소장의 실제 모델!
하종강 교수님께 듣는 솔직한 노동자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5월 29일(화) 오후 7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8호

주최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주관 : 충남대학교 역사연구동아리 『어두운이야기』

웹진 모음



2018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청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알바상식 이야기

일 시 | 2018.6.16(토) 오후1시

장 소 | “청춘”

(대전시 중구 중교로 36-1 호원빌딩5층)



이진아 공인노무사(이산 노동법률사무소)

주 최 |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웹진 모음

2018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이야기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오후 7시

장소: 대흥 노마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4, 2층)



강사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안울노동문제연구소장
6회 전태일문학상 수상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나쁜 사장과 싸워서 이기는 법

feat. 내 권리 잘 보장받는 법

feat. 떼인 알바비 받는 법

우리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노동권도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인권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찾아봅시다!

일시 11월 15일 목요일 19시

장소 cafe 꿈Asia (한남대정문 한남캠퍼스타운A 지하1층)

신청 010. 2858. 6659 (문자 신청 바랍니다)

※ 강연 참석하신 분들께 봉사 시간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웹진 모음



장소
청춘너나들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9, 2층 (샤크존 2층)
7월10일부터 매주 화요일 (4주)

수강생모집

청년, 노동자, 노동 인권학교

2018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강연주제 및 일정



7월 10일 화요일 17시
청년노동인권 이야기
"우리의 노동인권, 스스로 지킵시다"
이대식 (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장)



7월 17일 화요일 17시
한국비정규노동과 청년
"비정규직은 청년의 문제입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7월 24일 화요일 17시
역사 속 노동자의 삶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한상균 (천민주노동 위원장)



7월 31일 화요일 17시
청년노동정책과 방향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도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2018년 12월 4일(화) 15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

|발제 홍춘기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정현우 (대전노동인권강사)

|토론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진 (혁신청 사무국장)
최영연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김채란 (대학생)
전진한 (자영업자)
우승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주최 :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우승호 의원

청년노동인권 공개강좌



청년노동인권 공개강좌



청년노동인권 공개강좌



청년노동인권 공개강좌



청년노동인권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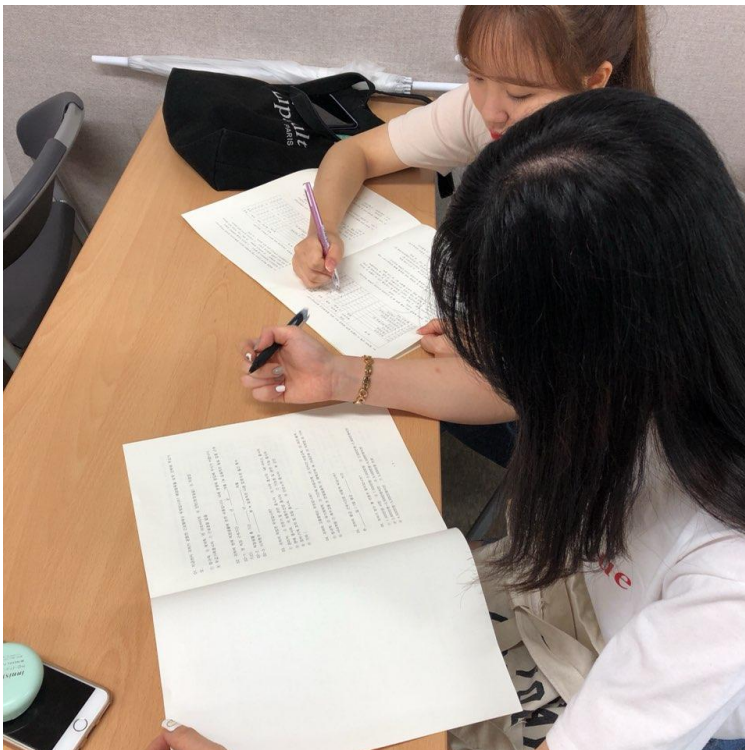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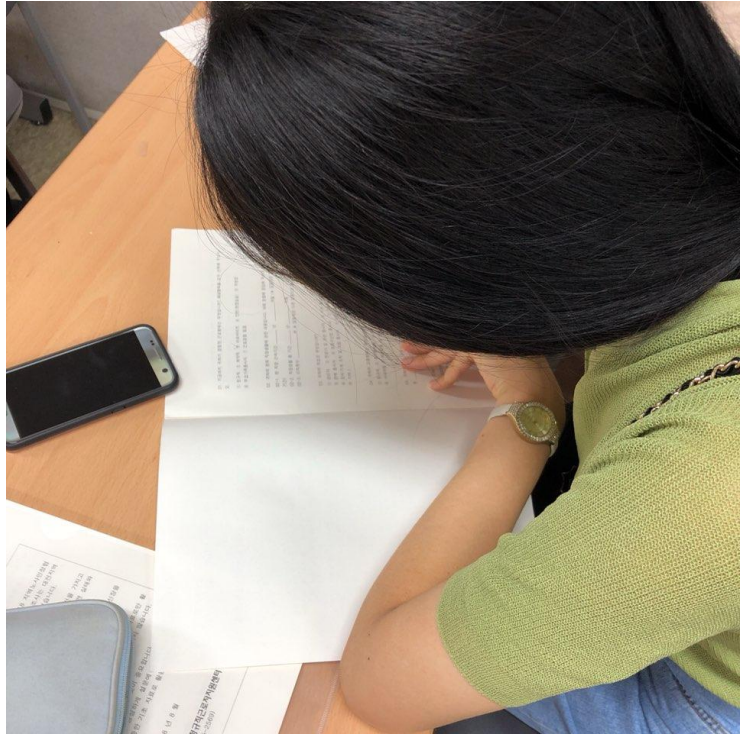
청년노동인권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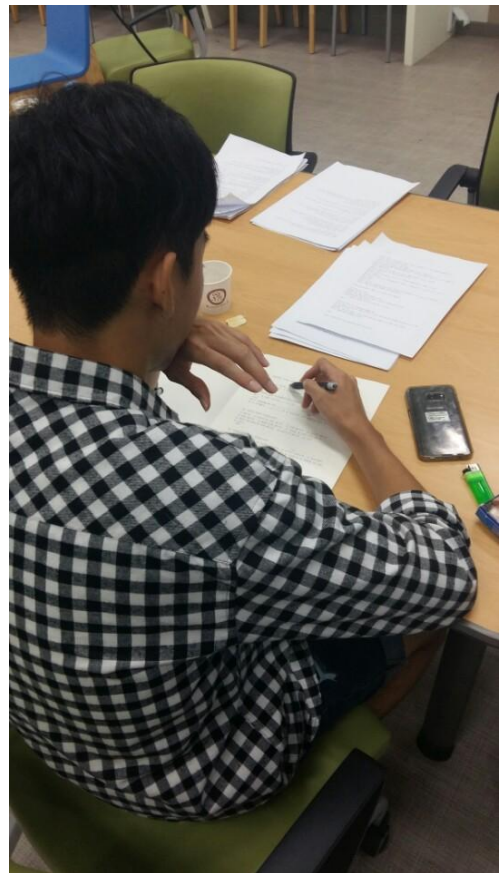
청년노동인권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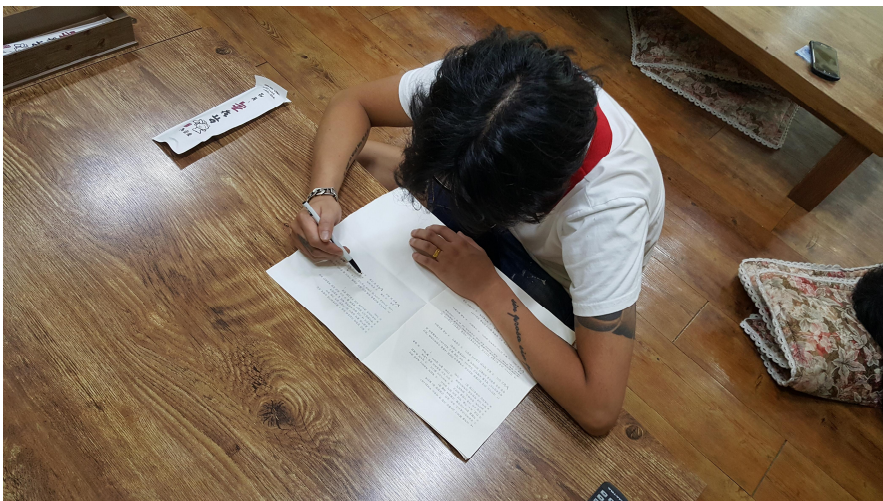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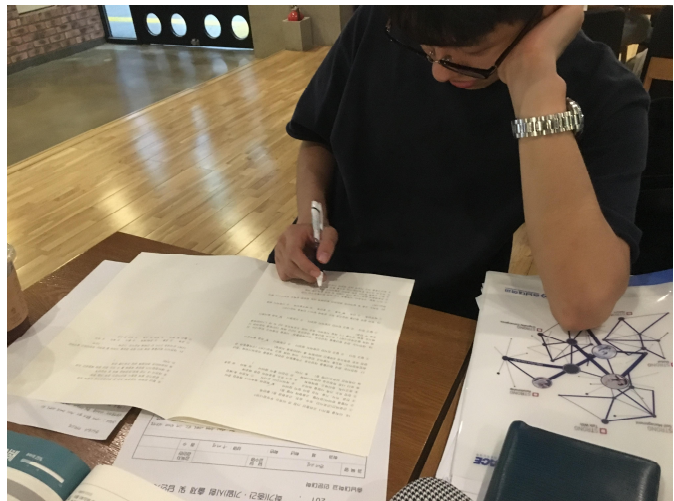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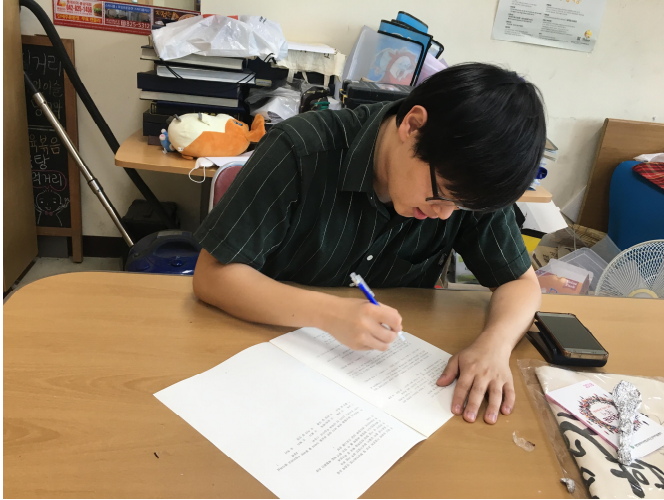
청년노동 실태조사



청년노동 실태조사



청년노동 실태조사



청년도동 정책토론회



청년노동 실태조사원 활동소감문

1

이번 청년노동실태조사에 설문 조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매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그들과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의하며 제가 노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저도 미래의 노동자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준비하고 만약에 저에게 비합리적인 일이 닥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저에게 찾아온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2

우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어서 되게 놀랐다.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설문에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신거 같다.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분류의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해보았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모인부분이 시간외 근로와 근로시간 임금 이 3가지로 나왔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일단 모든 분들이 각자의 할 일을 하시느라 바쁜 와중에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일 자체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며, 설문지의 양을 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하는 동안 당황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기로 한 이번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매번 힘들다고 느껴져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문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작성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이 힘든 시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희망카드’나 ‘청년희망통장’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더 확실한 광고를 통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게 하도록 대전광역시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힘들긴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노동 실태조사원 활동소감문

4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먼저 주위 사람들 위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무언가 실태조사가 아니라 주위 사람 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둔산동 같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요청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 정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몇몇 모르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알바나 일자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

실태조사원 활동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다니기에 앞서, 비정규센터에서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답례품과 설문지를 받고서 사실 조금 막막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직장인은 어디서 찾아하는 생각부터, 스물다섯 명을 언제 다 만나나 하는 생각까지. 그러나 나 또한 청년이며 (예비)노동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환경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취지에 동감해서 움직일 수 있었다.

처음 설문을 받으러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설문지의 취지와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며 실태조사 참여자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가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빙자해 사기를 친다든가, 사이버 종교로 포교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던가. 첫 날, 설문조사를 다니며 일일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대전시청이 지원하는 실태조사구요. 수집된 자료는 정책제안과 토론회 자료로 요긴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를 설명하느라 입이 아플 지경이었다.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도 일이었다. 들고 다니기에도 가볍지 않았지만, 굳이 안 받으려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었다. 그렇게 학교 주변을 다니다보니, 어느새 25장은 완성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직장인 섭외가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아닌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쪼록 25명이 대답한 노동환경에 대한 생각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기회를 주신 비정규센터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청년노동 실태조사 홍보물품



앞면



뒷면

청년노동정책토론회 언론기사모음

홈 > NEWS > 대전MBC뉴스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제목	대전시 청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발표
뉴스영상	
기자	조명아
방송일	2018-12-04



청년노동정책토론회 언론기사모음



▲ 4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베일에 싸인(?) 대전시 청년정책...취업희망카드·통장 잘 몰라

이정훈 기자 classstyle@cctoday.co.kr 2018년 12월 06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2018년 12월 05일 18시 59분

댓글 0      지연보기 폰트 + -   

市 올해 39개 분야 233억 투입
활성화·인지도 향상 속제로



노은역 눈부신성형외과피부과 AD

▲ @연합뉴스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ID:

--	--	--	--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018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전지역 청년들의 노동조건과 근로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대전 지역의 청년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는지,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등 근로조건 관련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향후 대전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응답한 설문지는 설문참여자 전체의 집단적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체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 통계법 제8조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주시면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18 년 8 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042-345-2569)

01. 지금까지 귀하가 경험한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아르바이트 ④ 인턴(현장실습) ⑤ 자영업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근로경험 없음

02. 귀하의 현재 직장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2-1. 현 직장 근속기간 _____ 년 _____개월 (※ 일용직은 동일 업종 근무 기간)

02-2. 직장생활 총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02-3. 이직횟수 _____회 ※ 일용직은 다른 업종으로 옮긴 횟수

0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수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

04.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기간제 비정규직 ④ 단시간 비정규직 ⑤ 파견/용역
⑥ 사내하청 ⑦ 특수고용 ⑧ 건설일용직 ⑨ 재택근무 ⑩ 가내근무 ⑪ 자영업 ⑫ 기타

05. 귀하의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 _____일 / 1일 평균 _____ 시간

06. 귀하가 받는 총 연봉은 얼마입니까?

- ① 1,500만원 미만 ② 1,500만원~2,000만원 ③ 2,000만원~2,800만원미만
④ 2,800만원~3,500만원미만 ⑤ 3,500만원~4,500만원미만
⑥ 4,500만원~5,500만원미만 ⑦ 5,500만원 이상

07. 일자리 선택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07-1. 임금/급여	①	②	③	④	⑤
07-2.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07-3.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07-4. 근로환경(복리후생 등)	①	②	③	④	⑤
07-5. 회사규모	①	②	③	④	⑤
07-6.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①	②	③	④	⑤
07-7. 회사와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07-8. 직업자체의 미래전망	①	②	③	④	⑤
07-9. 출/퇴근 거리	①	②	③	④	⑤

08. 귀하의 월평균 개인 지출 항목 중 큰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② 주류 소비 ③ 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 ④ 교통비 ⑤ 주거비
 ⑥ 보건의료비 ⑦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⑧ 교육비(학원 및 교재)
 ⑨ 의복비(의류) ⑩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⑪ 이·미용비 ⑫ 쇼핑 ⑬ 부채상환비
 ⑭ 문화/취미활동비(영화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비 등) ⑮ 기타 잡비

09. 귀하는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습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교육 받은 경로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가족(부모님/형제/자매/친척) ② 선생님/교수님 ③ 친구/선배/후배
 ④ 진로지도 프로그램 ⑤ 대중매체 ⑥ 오프라인 커뮤니티(동아리 등)
 ⑦ 학원(토익, 자격증, 공무원 등) ⑧ 학교 등 교육기관 ⑨ 온라인(포털검색/카페 등)
 ⑩ 국비지원직업학교 ⑪ 취업 및 진로 전문기관 ⑫ 기타 ⑬ 없음

10. 귀하는 위 경로를 통해 획득한 취업 정보 및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 이직을 했거나 고려중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여건(근로시간, 보수, 승진, 근로환경 등) 불만족
- ②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 ③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④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 ⑤ 창업 또는 가족 사업을 하려고 ⑥ 계약기간이 끝나서 ⑦ 직장의 휴/폐업
- ⑧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⑨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 ⑩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위해 ⑪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⑫ 육아 ⑬ 결혼
- ⑭ 가족적인 이유로(간병 등) ⑮ 기타()

17. 대전시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기위해 “청년 취업희망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직활동과 관련한 모든 항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원함)

-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③ 신청했다 ④ 처음 들어봤다

18. 대전시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적립하면 시에서도 동일 금액을 1:1 매칭 지원하는 목돈 마련 프로젝트로 3년 뒤 약 1,100만원을 찾을 수 있음)

-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③ 신청했다 ④ 처음 들어봤다

19. 위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⑥ 이용하지 않음

20. 귀하는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 계발, 구직준비, 사회활동 등을 위한 청년활동수당 지급
- ② 진로체험과 공공사업을 더한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 개발
- ③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온라인 포털사이트 개설
- ④ 국내·외 대규모 투자사업·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⑤ 청년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급여·4대 보험료 등)

- ⑥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⑦ 공공기관 용역 입찰시 청년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 ⑧ 대전시 내 기업 탐방/현장학습 확대 및 취업연계
- ⑨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년 창업 체험공간 조성
- ⑩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상담 프로그램 운영
- ⑪ 기타()

21.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 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 ② 교통 ③ 문화/체육 ④ 물가 ⑤ 복지 ⑥ 주거
- ⑦ 출산 및 육아 ⑧ 취업 및 고용 ⑨ 치안 및 안전

* 응답자 기본사항

1. 연령	만 _____ 세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사별	4. 가구원수	_____명(본인포함)
3-1. 자녀유무	① 없음 ② 있음 ()명	4-1. 주 생계부양자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5. 거주 형태	① 가족과 동거 ② 가족과 따로 거주(기숙사/자취 포함)		
6. 본인 출생지	① 대전시 ② 세종시 ③ 충청남도 ④ 충청북도 ⑤ 충청권 외		
6-1. 현 거주지	_____ 시(도) _____구(군)		
6-2. 대전 거주기간	_____년 _____개월		
7.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이상		

*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2016-10-20 조례 제 4785호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 4931호

(일부개정) 2018-08-10 조례 제 5139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 5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5.>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삭제<2018.10.5.>

제6조(기본계획)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건강권 보장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과학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3. 청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8.10.>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5.]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의 교류 확대)

① 시장은 국내외 청년·청년단체·청년협의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청년·청년단체·청년협의체 간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5.]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주거안정)

-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0.5.>

제19조(청년의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인, 보육, 대중교통 이용 등의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시설)

-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인적 협력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삭제<2018.10.5.>

제24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10.5.]

부칙 <조례 제478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9호, 2018.8.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조례 제5165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